

KDI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DI 북한경제리뷰

2006. 3

차 례

동향과 분석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이영훈) / 3

경제자료

북한경제의 실상과 전망 / 18

IT연구협력 상황보고서 / 26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특별보고서 / 31

부문별 주요동향 (2.25~3.24)

1. 대내경제 / 43

2. 농업 및 식량 / 48

3. 대외경제 / 51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59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70

동향과 분석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특징과 시사점

이영훈(한국은행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

yhlee@bok.or.kr

북한은 경제난으로 1990년 이후 최근까지도 공장가동률 20~30%를 보일 정도로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무역이 확대되면서 생산과 유통의 자기완결적인 자립적 재생산구조가 와해되고 대외의존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대북한 무역과 투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¹⁾

1. 북·중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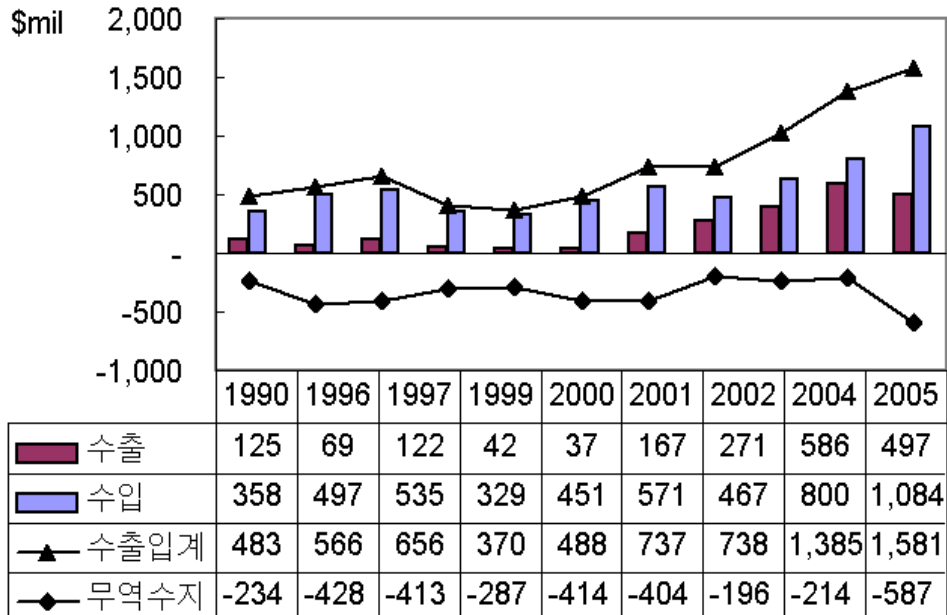
가. 무역 추이

(현황)

1990년 이후 북·중무역의 추이를 보면, 1999년을 전후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99년 기간 북·중무역 규모는 부침을 보이면서도 1999년 무역규모가 1990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친 반면, 199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 이전 시기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북·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보면, 2000~04년 북·중무역의 증가분이 남북교역을 포함한 전체 북한무역의 77%를 차지할 만큼, 북·중무역은 2000년 이후 북한 전체무역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1) 본 연구는 필자의 “북·중무역의 현황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6)의 일부 내용을 2005년 까지 업데이트하여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그림 1〉 북·중무역 추이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특징)

2000년 이후 급증,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2000년 이후 북·중무역이 급증하는 추세는 양국관계의 개선, 북한의 광물 등 1차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증대, 중국의 남북교역 중계지로서 기능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2002년 불거진 일본인 납치 문제, 핵문제 등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2003년 이후 북한의 대일 주력 상품인 수산물과 의류제품의 수출이 중국으로 일부 전환되면서 북·중무역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북·중무역의 증가는 경제성장, 시장경제의 진전, 물가안정 등에서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의 물품이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의 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타국과의 무역과 달리 중국과의 무역은 북한의 시장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고 있어 북한의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²⁾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2006)을 참조할 것

큰 폭의 적자, 그러나 차관과 무상지원 등으로 보전

북·중무역은 매년 2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전체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매년 8억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남북교역 제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적자를 어떻게 보전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무역적자를 위폐, 돈세탁, 마약거래 등의 불법자금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가지면서³⁾,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적자를 보전하던 불법자금이 차단 되면 외화부족으로 수입이 줄고 그에 따라 수출 및 생산이 감소하면서 북한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북한의 무역통계가 통관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지원성 무역이 일반적인 수입으로 기록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실제 적자폭은 그리 크지 않다.

우선, 북·중무역에서는 원유가 차관 형태로 도입되고 있으며 수입중 일부는 무상원조의 형태로 지원받고 있어 외화가 지불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고려하면 매년 1~2억달러 정도가 북·중무역 자체적으로 보전되고 있어 실제 무역적자는 크게 줄어든다.

〈표 1〉 북·중무역의 실제 무역적자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유도입액	75.6	108.8	76.5	121	139.3	197.7
무상원조액	27.6	69.1	16	10.9	14.6	38.1
합 계	103.2	177.9	92.5	131.9	153.9	235.8
실제 적자액	-310	-226	-104	-100	-60	-351

그리고 북한이 대중국무역에서의 적자는 거의 대부분 남북경협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로 보전될 수 있다. 남북교역에서 외화가 수반되지 않는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하고 상업적 거래에서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그리고 금강산관광 등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추정해보면 매년 약 2억달러에 달한다.⁴⁾ 그 외에도 방북비용, 해외친

3) 여기서 미국측이 추정하고 있는 불법자금 규모는 매년 약 5억달러 내외인데, 그 규모는 북한의 무역적자에서 일부 남북교역 및 친지송금 등으로 보전되는 것을 제하고 나면 5억달러 내외가 남게 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지들의 송금, 식당운영 등 외국에서의 외화벌이 등을 포함하면 대중국무역에서의 적자는 충분히 보전 가능하다.⁵⁾

나. 무역구조

(수출구조)

1998~2005년 기간의 대중국 수출상품구조 현황을 HS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품목은 어패류이다. 어패류는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대중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4년 44.9%로 최근 대중국 수출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전년대비 64.6%(169백만 달러) 감소함으로써 대중수출 감소(89백만 달러)의 주된 부분이 되었다.

〈표 2〉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위품목의 현황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HS	총액	37.2	166.8	270.9	395.5	585.7	496.5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3.4	4.3	11.3	17.3	53.0	112.2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4.0	48.0	143.0	206.9	261.2	92.4
26	(광, 슬랙 및 회)	2.6	6.4	8.5	15.0	59.0	92.3
72	(철강)	8.7	23.7	27.9	46.8	75.0	72.1
62	(의류/부속품)	0	26.8	38.3	52.2	49.1	58.3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9.9	4.6	9.3	13.6	14.7	14.8
79	(아연과 그 제품)	0.1	0.2	0.4	13.5	34.6	11.4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4) 북한의 남북경협을 통한 외화소득(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거래성교역*	51.9	97.8	173.1	148.4	158.2	194.4
금강산관광	136.0	37.2	21.5	13.1	15.2	13.5
합계**	187.9	135.0	194.6	161.5	173.4	207.9

* 단순교역은 일반교역수지 전액, 위탁가공교역은 위탁가공교역수지의 50%로 계산

** 이외에 금강산관광 관련 인건비, 상품구입 등과 개성공단 부지조성 및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제외

- 5) 더 나아가 북한무역에서의 적자도 중국의 원유차관 및 무상지원, 남북경협으로부터의 외화소득, 방북비용·해외친지들의 송금·외국에서의 외화벌이 이외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2000~05년 연평균 약 2억달러)을 고려하면 실제 북한의 무역적자는 매년 1~2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광물성연료, 철강, 광, 아연과 그 제품, 목재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공하지 않은 1차생산물이거나 낮은 가공단계의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광물성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 수출은 2005년에 전년대비 120.6%(108.3백만달러) 증가하였으며 광·슬랙 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광의 수출은 46.9%(64.3백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북한의 채탄 및 채광에 대한 집중투자에 기인한다.

(수입구조)

1998~2005년 동안의 대중국 수입상품 구조 현황을 HS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물성연료 및 광물류는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원유는 1990년대 들어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차관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2005년 원유수입은 전년 대비 41.9% 증가했는데, 이는 수입단가가 44.3% 인상된 데 따른 것이며 수입물량 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둘째, 육류수입은 2000년 이후 수입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5년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육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돼지고기의 수입은 94.4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9.9%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곡물인데 2005년 곡물수입은 크게 증가하여 2003년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금액으로 볼 때, 육류수입이 감소한 만큼 곡물수입은 증가하였다.

셋째,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전기기기, 철강제품, 기계류, 차량 및 부속품 등인데, 이들 중 전화기, TV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본재로 투입되는 생산재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위품목의 현황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HS	총 액	450.8	570.7	467.3	628.0	799.5	1084.7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117.9	161.8	118.0	180.7	204.4	285.7
	02 (식용육류)	1.4	6.7	10.4	63.6	140.6	104.2
	84 (기계류)	14.4	23.1	26.4	27.0	39.6	77.0
	85 (전기기기, 전자기기 및 부속품)	21.0	23.4	27.5	39.6	45.8	56.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7.3	23.3	25.1	24.6	32.0	52.1
	10 (곡물)	34.0	62.6	29.9	50.0	15.3	50.3
	72 (철강)	22.7	22.1	20.8	20.7	39.6	35.1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특징)

상품별: 1차상품 중심의 수출과 생산재 중심의 수입구조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구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주된 수출품은 어패류, 광물, 목재 등 대부분 1차상품이거나 중공업제품으로서 매우 기초 단계의 가공품인 철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4〉 북한의 대중국 제품별 수출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차상품	58.2	31.8	58.5	54.9	61.9	67.7	69.2	66.0
중화학공업	37.0	30.9	32.7	27.2	13.5	17.3	21.0	20.1
경공업	4.8	37.3	8.8	17.9	24.6	15.1	9.8	13.9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HS 2자리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품구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재(원자재와 자본재)가 약 8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2004년 크게 증가했던 식용육류 등의 소비재가 2005년도 들어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비재수입 비중이 크게 줄었다.

〈표 5〉 북한의 대중국 용도별 수입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원자재	67.2	63.6	64.7	64.7	62.5	56.0	53.3	70.8
자본재	10.5	15.0	21.0	15.7	17.6	14.9	16.7	13.1
소비재	22.3	21.4	14.2	19.6	19.9	29.1	30.0	16.0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HS 2자리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둘째,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식량(곡물과 육류)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중국 수입의 연평균 40%에 달하며 그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

〈표 6〉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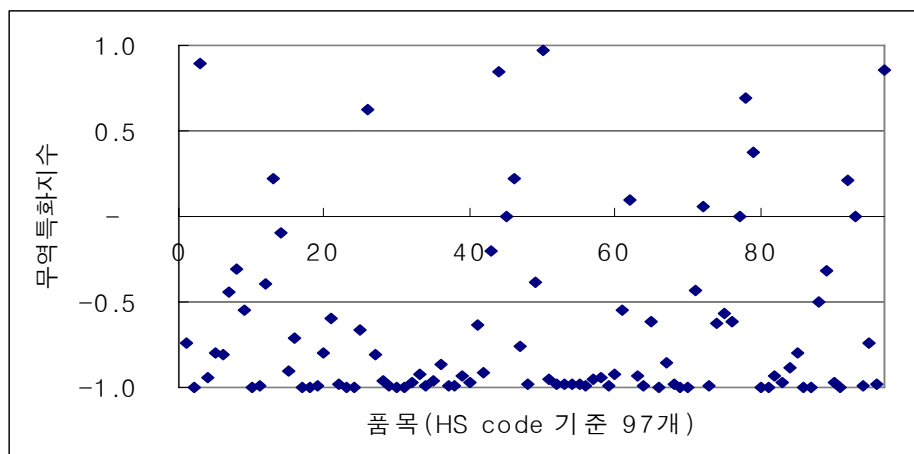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광물성 연료, 광물류		23.8	24.2	26.1	28.4	25.2	28.8	25.7	26.3
식 용 육 류		0.8	0.4	0.3	1.2	2.2	10.1	17.7	9.6
곡 물		14.4	13.3	7.6	11.0	6.4	8.0	1.9	4.6
합 계		39.0	37.9	34.0	40.5	33.9	46.9	45.3	40.5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HS 2자리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이는 북한경제의 기본 요소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수입으로 인해 다른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전히 북한이 에너지 및 식량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사정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북한의 대중국 경쟁력 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수출특화품목은 HS 96개 품목 중에서 12개 품목에 불과하며 수입특화품목은 81개로 수출특화품목 12개의 7배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무역특화지수 -0.9 이하 품목이 52개로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국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북한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1998-2005년 평균)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거래형태별: 변경무역 중심

통계상의 규모보다 큰 변경무역: 변경무역은 2001년 이전까지 대중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해왔다. 이처럼 변경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이유는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대해 수입관세와 增值稅(부가가치세)의 50%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 기인한다.

그런데 중국의 실제 변경무역 규모는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크다. 무역기업 또는 기관에 의한 변경소액무역(邊境小額貿易)과 달리 변경지역 주민들이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해관규정에 따르면 변경지역주민들은 국경출입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 1일 ① 3,000위안(360달러)의 현금과 ② 1,000위안 이내의 일반생활용품 및 식품, ③ 담배 400개피, ④ 술 2병, ⑤ 재봉틀, 녹음기, 선풍기, 카메라, 세탁기, 냉장고, 자전거, TV중 1개 등을 휴대할 수 있어 하루 약 5,000위안(600달러) 내외의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이 휴대할 수 있는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의 시장으로 유입되어 거래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4년부터 변경무역의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도 변경무역의 세제감면을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변경무역이 위축될 수는 있으나, 인접성에 따른 저렴한 물류비로 인하여 세제감면혜택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변경무역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3국 경유 반입에 대한 규제강화로 보세무역 감소: 2001년을 계기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주된 거래형태가 변경무역에서 보세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어패류와 같은 일부 우수한 북한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기업이 북한과 한국을 비롯한 제3국간의 무역에 보세무역의 형태로 개입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보세무역이 54.7%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산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수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국정부는 북한산 물품의 제3국 경유 반입에 대한 사전승인을 더욱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4년 11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산물품의 위장반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임가공물품을 제외한 북한산 물품의 제3국 경유 반입에 대한 사전승인이 한층 강화되었다.

〈표 7〉 북한의 거래형태별 수출

	(백만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a)	2005(b)	(b-a)/a
일반무역	1.3 (3.2)	0.9 (2.5)	9.7 (5.8)	8.8 (3.3)	20.9 (5.3)	75.0 (12.8)	147.9 (29.6)	97.3
변경무역	32.1 (76.9)	29.5 (79.3)	40.0 (24.0)	55.0 (20.3)	81.3 (20.6)	156.4 (26.7)	181.9 (36.4)	16.3
무상원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가공무역	5.4 (13.0)	5.0 (13.5)	21.2 (12.7)	11.0 (4.1)	10.3 (2.6)	21.7 (3.7)	20.9 (4.2)	-3.4
보세무역	2.3 (5.5)	1.4 (3.6)	94.9 (56.9)	191.9 (70.9)	278.3 (70.4)	321.1 (54.8)	145.4 (29.1)	-54.7
기 타	0.6 (1.4)	0.4 (1.1)	0.9 (0.6)	4.0 (1.5)	4.5 (1.1)	11.4 (2.0)	3.0 (0.6)	-62.5
총 계	41.8 (100.0)	37.2 (100.0)	166.7 (100.0)	270.7 (100.0)	395.3 (100.0)	585.7 (100.0)	499.2 (100.0)	-14.3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안은 비중

지역별: 동북3성에 편중된 무역

변경무역과 보세무역 등의 이점으로 인해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중국의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을 보면 중국 변경무역의 관세혜택으로 인해 접경지역인 요녕성과 길림성에 전체 수출의 90%가 집중되어 있으나 2005년도 요녕성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했던 요녕성 단동을 경유한 어패류 수출이 2005년 이후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표 8〉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수출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요녕성	43.1	42.9	40.5	67.7	80.4	81.6	66.8	48.9
길림성	41.2	47.6	48.6	15.0	12.5	12.4	18.0	20.7
흑룡강성	3.9	0	0	0.6	0.7	0	0.5	1.6
기 타	11.8	9.5	10.9	16.7	6.4	6.0	14.7	28.8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편 북한은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등 동북 3성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60~70%를 수입하고 있다.

〈표 9〉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수입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요녕성	37.5	36.2	31.9	30.3	28.9	24.5	26.0	29.9
흑룡강성	19.3	17.0	20.8	24.2	23.8	25.5	25.7	22.6
길림성	12.9	15.2	16.0	16.1	17.6	15.6	11.9	12.7
기 타	30.3	31.6	31.3	29.4	29.7	34.3	36.4	38.4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이처럼 대중국 무역이 동북3성에 편중된 주된 이유는 세제감면 혜택과 지리적 인접성 등에 기인한다.

2. 중국의 대북투자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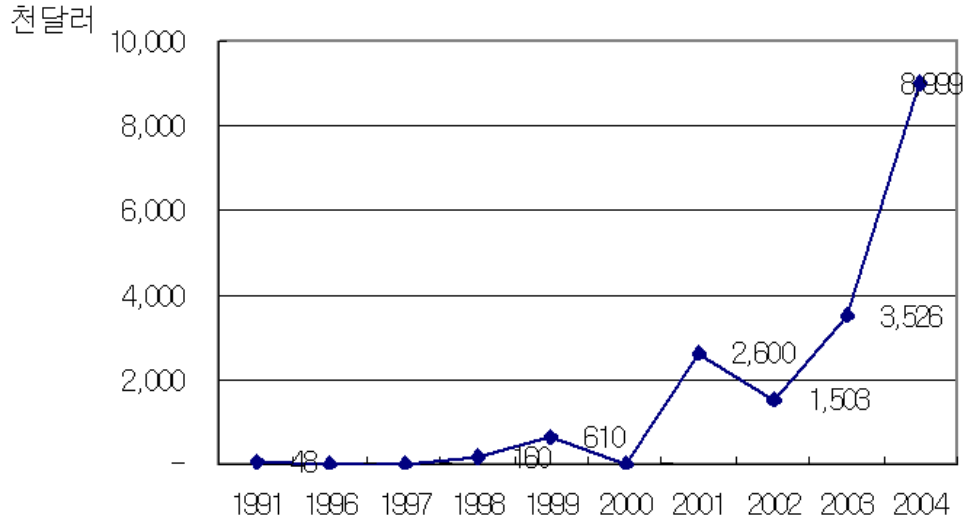
현재까지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무역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적고,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역에 비할 바가 아니다.⁶⁾ 공식적인 실행액 기준으로 볼 때, 2004년에도 1천만달러에 미달하고 있으며, KOTRA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은 투자금액을 합한다 하더라도 5,0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해외투자확대, 그리고 최근 매우 긴밀해지고 있는 북·중 정치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의 대북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2004년 12월부터 임금, 세금 및 기타비용을 인하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인하하였는데, 월 최저임금을 60~80유로를 30유로로 낮추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및 기타비용

6) 북·중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의 진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영훈(2006)을 참조.

〈그림 3〉 중국의 대북한 투자 실행액 추이



출처: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KOTRA(2005)

을 인하여 적용하였다. 전기, 물, 가스요금, 항구 사용 등 운영비용을 30%p 인하하였으며, 북한 경내에서 물물교역에 대하여 거래세를 면제하였다. 셋째, 외국투자기업의 신청 및 등록기한을 5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다.⁷⁾

또한 2005년 3월 북한의 박봉주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북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4년에 대북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조화우련(朝華友聯)문화공사>을 신설함으로써 대북투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설립 당시 이 공사는 매년 약 3천명 규모의 상업시찰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 특징

(무역과의 연계)

지금까지 대북한 투자대상을 보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인 무역관련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공장가동 현황을 보더라도 군수산업 및 주요 기간산업의 공장·기업소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역 관련 공장·기업소가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7) 자세한 것은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북한 투자설명회 참가결과”, 2005.2 참조

수출부문: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수산물, 광산물 등의 1차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생산은 상당부분 중국의 투자에 기반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은 선박과 원료를 제공하고 북한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으며, 북한은 그 대가로 채취한 수산물의 일부를 중국에 제공하거나 전량을 판매해야 한다. 그나마 선박과 원료가 부족한 북한이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투자에 기인한다. 또한 중국의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산청년동광, 무산철광산, 용등탄광 등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통부문: 중국은 북한의 유통업에 진출하여 중국상품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다. 중국측은 이러한 유통업에의 진출을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북한시장에서 중국상품의 점유율과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시장의 번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유통부문에 대한 진출을 보면, 우선 2002년 6월 길림성 훈춘 길성 무역회사가 북한과 합작해 량강도 혜산시에 량순백화점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선양(瀋陽)시 무역촉진회와 조선대성그룹이 평양시에 공동으로 건설한 <조선-중국상품경영판매센터>가 영업을 시작했다. 2005년 5월 중국의 절강(浙江)성 동양귀화이(東陽國匯)무역유한공사가 평양제1백화점 내 3개 층 매장 경영권을 취득했다. 동양귀화이는 또 이번 백화점 진출을 기반으로 평북 신의주와 남포, 해주 등 지방도시에도 이와 유사한 매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에는 북한과 중국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통강 공동 교류시장’이라는 수입 생산재 시장이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원산, 홍남, 청진, 남포 등 각 도의 중심도시에 지방수입물자교류시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는 북한당국과 훈춘시가 중국측 샤토허(沙陀子) 세관 부근과 북측 류다섬(함경북도 새별군)에 공동으로 국제 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⁸⁾

(동북3성 개발과의 연계)

중국의 대북투자는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2005년 6월 공포된 국무원 판공청 제 36호 문건 <동북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실시의견>⁹⁾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특히 동 문건의 ‘지역경제협력의 발전’과 ‘대외개방가속화’ 관련 조항들이 중국정부의 대북투자 방향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조항들을 대북투자와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연합뉴스>, 2005.12.7

9) 國辦發(2005) 36號, <國務院辦公廳關於促進東北老工業基地一步擴大對外開放的實施意見>

에너지·원자재·광산개발 : 2005년 해산동광, 용등탄광, 무산광산 등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차원의 해저유전 공동개발 합의는 “해외진출장려(走出去) 전략을 실시하여 주변국가와 함께 에너지, 원자재, 광산 자원의 협력개발을 강화한다”(16조)는 방침과 “동북지역 기업의 해외 중점개발 항목에 대해 전(前)단계 비용과 국내 대출 이자를 적극 보조, 지원하며 그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하도록 조치한다”(19조)는 방침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인프라건설 : 2005년 9월 중국이 북한 두만강 유역의 나진항에 대해 50년 동안 개발·사용권을 갖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¹⁰⁾ 중국의 나진항 개발은 중국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중국은 대련항과 단둥항으로 향하던 화물을 훈춘으로 돌려 나진항을 거쳐 태평양으로 뻗을 수 있는 요로의 무역통로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는 “러시아와 맞닿는 도로, 항구와 북한과 맞닿은 도로, 항만, 지역에 대해 일체화(연계화) 건설을 추진하고 해외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는 동부지역의 국경지역에 접해있는 교통, 항만, 비행장 등 인프라 건설항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24조)는 방침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둥-신의주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36호 문건의 후속 조치로 나온 단둥시 발전개혁위원회의 8월 10일자 보고서를 보면, 북중 압록강 대교, 경의선 철도중 북한 철도구간에 대한 중국의 원조프로젝트 추진, 대동항 확장과 북-중해상운송로 재개설, 압록강 대교 출입국사무소 설치, 대북한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장기적 검토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특구건설 : 2006년 3월 초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에서는 처음으로 단둥과 신의주의 경제특구화 방안이 제출되었다.¹¹⁾ 이는 “변경지역의 경제협력지구, 상호무역지구와 수출가공지역의 건설을 가속화한다”(18조)는 방침에 뒤이은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동북3성의 개발을 위해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진출장려(走出去) 전략에 대해 국내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정치경제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10) 나진항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원정리-나진항 간 67km 고속도로 건설, 나선시내 5km² 부지 종합개발과 보세가공구역 및 공단 건설, 나진항의 기존 3호 부두 개조 및 4·5·6호 부두 건설, 원정리-나진 간 도로 변 종합서비스 시설 건설 및 경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11) 이 제안은 북한의 경제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중국과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보세구역을 국경 주변에 설치, 공동관리하고 단둥을 경제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2002년 북한이 사전조율 없이 인접지역에 경제특구를 세우려 한 것에 크게 반발했으나 최근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져 오히려 중국 측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2006.3.26.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압록강 하구의 비단섬을 새로운 경제특구 후보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비단섬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으며 향후 이 섬에 금융센터 등을 건설,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 2006.3.7.

해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대북투자는 정치적인 의도 이전에 동북3성 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3.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자기 완결적인 경제구조는 와해되었다. 주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족한 생산재와 소비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무역이 집중되고 있는 동북3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중국 의존의 심화현상은 중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중국의 대북한 원자재 수요 급증, 북·중간 지리적 인접성, 변경무역의 세계 감면 혜택, 그리고 양국간 긴밀한 우호관계 등에 기인하는데, 이들은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얻기 힘든 이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는 한 이러한 이점들을 배경으로 북·중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대북 억압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미국의 금융제재도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이 예상하는 것보다 작을 것이며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북한의 무역적자가 그리 크지 않으며 그에 따라 불법자금 규모가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로 우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 특히 동북3성 개발과 연계하여 바라보아야 하며, 우려해야 하는 점은 의도적인 정책보다도 중국의 고성장과 그에 따른 자연스런 영향력 확대에 있다. 향후 남북경협을의 방향과 실천방안도 이러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표〉 7.1조치 이후 중국의 대북한 주요 투자 사례

1	슬레이트	미상	2003년 11월 연합뉴스	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 및 창춘영초과학주식유한회사 공동, 투자 규모 및 위치 미상
2	대안유리 공장	2,400만불	2004년 3월 연합뉴스	중국의 대북원조 성격, 평남 대안군에 중국의 요화유 리집단공사(耀華.璃集團公司)가 건설
3	트랙터	미상	2004년 7월 koreancc.com	중국 하남일타집단(河南一拖集團), 조선금성트랙터 공장간 시행계약 체결
4	제1백화 점 운영	5,000만 위안 (약600만불)	2004년 8월 KOTRA 보도	선양 중취그룹(Zhongxu jituan, 中旭集團) 및 평양 제1 백화점. 수입관세 5%, 소득세 5%만 부과
5	어로		2004년 9월 연합뉴스	북한 상명무역총회사는 베이징종합화학무역공사와 원산 앞바다를 5년간 개방하고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 고의 25%를 현물로 받는 공동협력 계약 체결
6	담배, 의류, 무역	2,000만불	2004년 11월 中新吉林新聞 網	지린성 상무청 관계자가 성내 대북 투자기업 9개사가 총 2천만불을 북한에 투자했다고 언급
7	운송	7억위엔 (8500만불)	2004년 11월 연합뉴스	온주낙청성금쾌속기차북무유한공사(溫州樂清盛金快速 汽車服務有限公司), 북한의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 합작
8	해산동광 개발	2.2억위엔 (2680만불)	2005년 1월 연합뉴스	중국 길림성 장백현(長白縣), 산둥성 초금집단 (招金 集團)이 공동으로 장백초금광업 주식유한회사 (長白招 金鑛業株式有限會社)설립, 량강도 해산 동광 개발
9	소비재		2005년 3월 연합뉴스	중국의 지린식용유수출입회사, 북한의 평양담배종이 제조공장이 합작 공장을 설립, 여성용 생리대 생산
10	조선-중 국상품경 영판매센 터		2005년 5월 흑룡강신문 2005년 5월 영업 시작	선양(瀋陽)시 무역촉진회와 조선대성그룹이 공동으로 평양시에 건설. 판매 제품의 60%랴오닝(遼寧)성 제품. 시장과 창고, 물류운송 등 3개 부분으로 구분
11	나진항 개발	800억원	2005년 9월 경제참고보, 국제선구도보 등	중국 측은 라진항을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 득하는 대신 북한 내 도로 건설, 관광 시설 및 공업 단 지 조성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
12	자전거	65만불	2005년 10월 조업시작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외경제합 작촉진위원회가 평진자전거합영공장 설립, 양측은 20 년간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관리할 것을 약정
13	탄광개발	미상	2005년 10월 길림신문	중국 오광집단(五鑛集團)은 북한 림경만무역상과 합자 기업 설립 협약서에 서명하고 평북 용등탄광을 개발 하기로 합의
14	유전공동 개발	5억달러	2005년 12월 협정 체결	북중간 유전공동개발 합의, 평안남도 안주 인근 황해 앞바다에서 석유 공동 탐사
15	무산광산	70억위안(9 억달러)	2006년 3월 연합뉴스	중국 3개 기업 50년 무산광산개발 추진, 최근 투자계획 포기

출처: KOTRA(2005)와 최근 뉴스를 종합

경제자료

북한경제의 실상과 전망

본 자료는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조선신보」에 게재된 “상승의 궤도 따라 조선경제의 실상과 전망”이라는 기획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 기사들에서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요인들, 1998년부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들과 그 성과들을 북한 입장에서 제시, 평가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강계정신이 제시된 1998년부터 3년간은 경제회복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2001년부터 북한은 경제강국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공업구조의 개혁 △농업혁명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방법으로는 북한이 처한 자원부족 등을 감안해 본보기 단위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며 공업구조의 경우는 내부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시킨다는 입장이다. 농업부문의 관련해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주체농법 관철 △종자혁명 △두벌농사 △토지정리 △농업기술혁명 등의 과업들이 제시되고 그 관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기사에서는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 장기전망계획 없이 단년계획만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기간공업과 농업에서 2008년까지 제시된 3년연속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 목표는 80년대 발전속도의 재현 ('조선신보', 1. 16)

- 북한의 경제건설에서 지난 10여년간은 '시련에 찌던 시기'였음
 - 북한경제는 1980년대 후반까지 상승의 궤도에 따라 발전하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시장이 소멸되고 종전에는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유무상통으로 이루어지던 연료와 자재의 거래가 차단되는 등 조건과 환경이 일변하였음
 -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로 인한 후과는 1994년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났음
- 북한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의 노정을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90년대 후반의 몇해 동안은 경제형편이 악화되었지만 1998년부터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이 세워지고 집행되어 나갔음
 - 1998년 강제정신이 창조되었고, 전체인민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강행군을 벌렸음
 - 1998년부터 3년간은 경제부흥의 준비를 다그쳐나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 2001년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 시련의 시기에 구상된 경제 정책들이 현실에 구현되어 나갔음
 -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인민경제의 개진현대화 △공업구조의 개혁 △농업혁명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 등임
 - 2005년 경제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2001년부터 5년간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의한 것임
 - 2005년 기간공업과 중요공업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났으며 알곡생산이 늘어나 먹는 문제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
- 90년대 후반부터는 중, 장기의 전망계획 없이 해마다 단년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왔음. 북한은 올해부터 기간공업과 농업에서 3년연속계획을 집행하게 됨
 - 2008년까지 기간공업(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과 농업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제시되고 그 연관부문들의 생산이 여기에 맞물리도록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이루어졌음
 - 북한이 3년연속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아마도 198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수준의 재현임

2. 적절한 처방으로 악순환 극복 (『조선신보』, 1. 18)

□ 1990년대 후반 경제전반이 하강선을긋게 된 것은 선행부문이 침체상태에 빠졌기 때문임

- 전력공업은 우선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였고, 적지 않은 화력발전소들은 설비들이 노후화되어 원래의 생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음. 설비를 보수, 개진하려고 해도 자금이 없었음
- 국내에 없는 콕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외화가 없어 필요한 양을 살 수 없었음
- 식량문제는 최대의 시련의 하나로 공장, 기업소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농업생산의 격감 또한 경제적인 악순환의 심각한 고리로 존재

□ 북한은 2000년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적인 결속을 내외에 선언하고 2001년부터 경제강국건설을 본격화해 경제전반을 상승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집행되었음

-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한 개진현대화는 특히 기간공업의 각 부문들에서 힘 있게 추진
 -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소들의 설비들을 보수하고 기술혁신과 개진현대화로 현존 설비의 발전능력을 대폭 끌어올림
 - 화력발전소들에서는 보조용 연료로 쓰던 중유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 개조를 진행
 - 지난해의 전력생산 실적은 전국의 공장, 기업소의 설비가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함
- 공업구조도 내부의 원료, 자재를 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나갔음
 - 금속공업부문은 콕스가 아니라 국내매장량이 많은 무연탄에 의한 철생산방법을 도입

-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원료, 자재의 수입의존률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전력소비량의 삭감 등 이미 쓰던 것도 더 절약할 수 있게 생산공정을 혁신
- 2002년 이후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
 -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철저히 관철되는 과정에 경영일군들의 일본새가 달라짐
 - ‘실리’를 따지며 더 높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영전략이 세워지고 노동자들의 생산의욕도 올라감
 -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새로운 공간도 마련
 - 국가계획의 수행에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수익을 얻은 공장, 기업소는 자체의 힘으로 원료와 자재를 확보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실현
- 농업에서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주체농법 관철 △종자혁명 △두벌농사 △토지정리 △농업기술혁명 등의 과업들이 제시되고 그 관철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 특히 2005년은 국가적 차원에서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이 총집중, 총동원된 결과 알곡증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

3. 국가적인 농업지원체제 확립 (『조선신보』, 1. 23)

- 지난 해 알곡생산의 구체적인 통계는 발표된 것이 없지만 2006년 3지공동사설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고 총화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생산실적을 내걸었던 목표에 거의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
 - 농업성 장시필 대외협조국장은 지난 해의 증산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총동원, 총집중방향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
 -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봄철영농작업을 다그칠데 대한 구호가 제시된 5월 중순부터 중앙과 지방의 일군, 노동자, 사무원, 청년학생 그리고 가정부인들까지도 노력지원에 나섬. 모내기 기간에는 매일 수백만명이 농촌에 나갔다고 함
 - 농사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와 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내줄데 대한 방침에 따라 연관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생산설비에 만부하를 걸었음

- 최근년간 나라에서는 농업증산을 위한 투자를 진행
 - 전국적 범위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개하여 규격포전을 꾸렸음
 - 개천-태성호, 백마-철산을 비롯한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여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 농사에 절실한 물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마련
-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등 일련의 농업혁명방침들도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
 - 협동농장마다 남먼저 다수확품종의 종자들을 받아들이려는 열의가 높아가고 있음
 - 지난 시기 정주(평안북도)이남 지역에서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두벌농사가 지난 해에는 정주이북의 많은 지역에서 벌어졌음
- 농업성 장시필 대외협조국장은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 정부, 비정부기구들의 협조는 북한의 농업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식량지원이 아니라 '개발협조'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

4. <<하나가 열, 열이 백>>, 현대화의 방법론 (『조선신보』, 1. 27)

- 개건현대화에는 많은 자금과 자재, 설비와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선후차를 가려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
 - 개건현대화에는 다른 나라에서 선진기술에 기초한 설비를 사들이는 방법과 현존 설비를 개건하여 그 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하여간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선후차를 가려야 함.
 - 생산소비적으로나 기술경제적으로나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경제의 각 부문, 단위들 가운데 “전반적인 생산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초로, 토대로 되는 부문과 단위들”에 먼저 투자를 집중
 - 즉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개건현대화하는 방법”은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이라는 측면도 있음
 - 기계공업부문에서 본보기 공장의 대표적인 단위는 평안북도에 있는 구성공장 기계공장임

- 구성공장기계공장에서는 종전의 설비들을 컴퓨터조정장치를 갖춘 최신형 공장기계로 일신하여 유연생산체계를 확립
 - 기계공업성에서는 이 본보기공장의 경험을 회천공장기계공장이나 락원기계연합기업소에서도 살려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
 - 이 결과 락원기계연합기업소(평안북도 신의주시)는 지난 해 개건현대화에서 큰 진전을 이룩해 “개건현대화의 또 하나의 본보기”로 대두
- 북한에서는 경제의 개건현대화도 “집단주의 원칙에 철저히 기초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다”는 입장

5. 인민생활을 위한 선행투자 (『조선신보』, 1. 30)

- 경공업성 한청수 생산부국장에 의하면 성에서는 인민생활에 긴요한 ‘1차소비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개건현대화를 추진
- ‘1차소비품’에는 된장, 간장과 같은 기초식품, 비누, 치약, 칫솔 등 15가지 품목들이 지정
 - 지난 해 2005년의 기초식품생산량은 2000년에 비해 150%로 성장
- 지난 해 경공업부문의 개건현대화에서 이룩된 성과의 하나로 꼽는 대상은 평양방직공장에 새로 꾸려진 편직사직장임
- 공장에서는 모든 공정을 현대화. 이 생산공정들은 하나로 종합된 자동흐름선으로 되어 한명의 기대공에 의해 조정. 다만 몇 명의 노동자들이 설비의 정상운영 상태를 감시하고 있을 뿐임
 - 이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갱신한 것은 30년만의 일로 현 방직설비의 특징은 한마디로 “컴퓨터의 도입으로 생산공정의 자동화, 고속화가 실현”된 것임
 - 공장에서는 최신 설비에서 가공된 실의 질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제품수출도 추진해 나갈 계획

6. 더 높이 비약할 수 있는 근거와 담보 ('조선신보', 2. 1)

-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최악의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부흥의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국가영도자의 수완과 실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북한이 경제적 시련의 후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간 것이 1998년부터, 3년 후인 2000년에는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인 결속을 내외에 선포하였고 2001년부터는 경제강국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지난 해 2005년에는 나라의 경제전반이 상승의 궤도에 오르게 하였음
 - 해마다 연초에 발표된 3지공동사설은 이러한 노정도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음
 - 1998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해의 총진군을 다그치자", 2000년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1년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2005년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본보기 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것은 최고지도자가 정책집행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온 방법론임
 - 1998년 정초의 자강도 강계시의 현지도는 이 해 공동사설에서 호소한 '총진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음
 - 북방의 도시 강계에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한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
 - 경제적 측면에서 현지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발휘된 것으로 공업부문의 개건현대화도 만약 공장, 기업소들이 각기 자기 식으로 생산공정을 갱신한다면 많은 투자를 전제로 한 최신과학기술의 도입에서 사회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었음
- 경제부흥의 밑천을 마련할 수 있는 요인은 또한 수십년간에 걸쳐 다져온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존재했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인민들의 높은 교육문화수준을 들 수 있음
 - 새로운 과학기술이 도입되면 그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능

력을 가진 인민들이 존재

- 다시 말해 북한이 시련을 이겨내며 경제의 상승을 실현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국가지도자의 비범한 영도 △일심단결의 위력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 △인민들의 높은 자질 등으로 이것은 북한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담보이기도 함

경제자료

IT연구협력 상황보고서

(김책공대/시라큐스대학/코리아소사이어티)

본 자료는 2001년 초부터 북한의 김책공대와 미국의 시라큐스대학, NGO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그동안 추진해 온 IT분야 연구협력과정, 동북아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세미나(Regional Scholars and Leaders Seminar: RSLs)프로젝트의 내용 그리고 그동안 이들 대학 및 기관들이 접촉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정리하고 있다.

올 1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연구협력으로 건설된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을 첫 현지지도 장소(김책공대의 체육관도 현지지도)로 선택했으며, 북한은 1월 24일 이 시설들에 대해 준공식을 개최한바 있다.

북한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을 정보기술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본보기 단위로 설정하고 향후 과학기술을 세계에서 최첨단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과학기지를 마련하였다고 선전하였다.

북한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이 젊은 과학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이 자료에서는 이것이 2001년부터 8월에 걸친 시라큐스대학과 김책공대 연구자들의 IT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자료에서는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 건설은 북한의 탄탄한 IT 하부구조 구축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북한이 외부세계와 접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료원: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620KUTSU.pdf>

김책공대/시라큐스대학의 연구협력

시라큐스대학(SU)과 코리아 소사이어티(TKS)는 2001년 늦은 봄에 북한의 UN 대표단과 협의를 시작하였고, 2002년 3월 평양에 있는 김책공대와 통합정보기술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협력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8번의 연구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다섯번은 김책공대 연구자들이 시라큐스대학에서(2002년 3월과 12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2005년 11월), 두번은 시라큐스대학의 연구자들이 김책공대에서(2002년 6월과 2004년 6월) 그리고 나머지 한번은 북경에서의 공동모임(2005년 8월)이었다. 이러한 교류의 기간은 1주에서 5주까지였다. 상호협약에 따라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은 시간이 지나도 대표단 구성에서 상당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류할 때마다 과거 교류에서 이루어냈던 결실들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었다.

현재의 연구는 새로운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의 백엔드(back-end) 도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개방형 소스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 중인 모든 소프트웨어는 도서 메타데이터(metadata)에 대한 국제기준을 따르게 될 것이다. 추진 중인 김책공대 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전자도서관의 메타데이터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규정에 근거하는 유사한 컴퓨터 연구실을 각각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라큐스대학과 김책공대에 있게 될 유사한 컴퓨터 연구실은 원거리에서 공동작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방문연구자들에게 동일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5년 11월 시라큐스대학에서 개최된 연구미팅에서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학장들은 공동으로 이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조인하고 미 상무성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것이 승인되면 유사 연구실에 필요한 기술장비에 대한 수출통제가 풀리게 될 것이다.

연구협력의 관리는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프로젝트 이사들,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부학장,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집행이사, 큰물피해대책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 합동조정그룹(JCG)이 수행한다. 합동조정그룹은 프로젝트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상호교류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다. 이 그룹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작성하고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부학장들이 서명한 합의문에 기술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결실로는 양측대학에 유사한 연구실 구축, 프로그램 검증, 컴퓨터프로그램 수정을 위한 공동작업,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 참여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영어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김책공대, 시라큐스대학,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대표단 그리고 북한참가단이 공동으로 작성한 학술논문 등이 있다.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은 북한내부의 탄탄한 IT 하부구조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도서관은 북한 내부의 비군사부문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북한이 외부세계와 접촉을 늘리게 되고 미국기관들과 협력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신뢰를 쌓게 될 것이다.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 전자도서관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서관의 발전은 협력을 함의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신뢰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8월에 달하는 연구교류에서는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동일한 핵심인물들이 참여하였다. 김책공대의 주요한 인물들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한다는 것은 미국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북아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세미나

2005년 연구협력의 일환으로 정보공유에 참여하고 국가간에 협력을 도모하며 유연하고 신뢰할만한 지역간 의사전달체계를 구축, 유지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동북아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세미나(Regional Scholars and Leaders Seminar: RSL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RSLS의 관리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시라큐스대학이 맡고 있다. NGO와 연구대학간의 이러한 협력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 RSLS의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각 기구의 독특한 힘을 잘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화중과기대학, 북한의 김책공대, 남한의 포항공대,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시라큐스대학 등이 RSLS 틀내에서 협력하고 있다. RSLS의 초기 의제는 표준화된 세부통합정보기술이 어떻게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RSLS는 북경에서 김책공대의 연구원과 북한 외무성 관리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의 내용은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와 시라큐스대학, 코리아 소사이어티 대표자간의 직접적인 협의의 산물이었다. RSLS 참여기관들의 하루에 걸친 미팅은 영어교육시간에 이루어졌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RSLS의 영어훈련은 북한 참가자와 RSLS 참가기관들간의 비공식 교류에 매우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뢰구축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RSLS는 여러 차례의 사회, 문화이벤트를 주관하였다. 여기에는 개막과 폐막 연회, RSLS 참가그룹과의 저녁식사, 북경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Donald P. Gregg 대사가 주최하는 만찬, 자금성 방문, 북경의 버스관광과

쇼핑관광 등이 있다. 연구라는 중심적 과제를 넘어 협력이라는 가치 있는 부수적 효과로는 각 참가자들이 두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안문제에 대해 문화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특히 도움을 주었다. 2005년 11월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의 학장들은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과 함께 RSLs 프로그램 하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힌 문서에 서명하였다.

체득한 교훈

기관들의 참여의지: 김책공대, 시라큐스대학,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 참가자들의 협력에 대한 물심양면의 참여의지는 학문적인 작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안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면의 중요성: 초기에 시라큐스대학,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북한 대표단간의 직접적인 대면협회의는 개방된 분위기에서 우선순위와 제약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시킬 수 있었다.

신뢰감 있는 의사소통: 점진적으로 일을 추진함으로써 두 팀간의 의사소통에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기분 좋게 협상할 수 있었고 문제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 이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혜택: 모든 참가자들은 신뢰감 있는 의사소통 덕분에 RSLs 프로그램 같은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좋아하였다. 교류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은 주요 협력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시라큐스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시라큐스대학은 2005년 11월 뉴욕대와 시라큐스대학에서 북한 적십자사 의사들에게 선진적인 심장학교육을 주선하였다. 전자도서관 및 열람시설을 통한 디지털이미지 전송과 다른 교육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서면작성: 최상의 의도와 호의가 있더라도 오해의 소지는 항상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으로 수용한 서면기록을 남기려는 노력이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간 준비와 충돌에 대비: 시라큐스대학과 김책공대의 연구자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것은 유사한 연구실의 구축에서 그러하였다.

정보의 적절한 공유: 북한과 미국은 정보공유에 대해 상이한 사고와 관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정직한 정보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말 것: 신뢰감은 이전에 신뢰할만한 상호교류를 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최종기한을 맞추고, 위험요소를 명확히 파악하며 프로젝트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참여의 일관성 유지: 김책공대와 시라큐스대학이 주요 인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협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관리공유의 중요성: 지속적인 협력에서 우선순위, 향후 방향, 재원조성의 문제들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공유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 목표는 개방적이고 감정이 이입된 의사소통이 전제된 신뢰감 있는 의사전달의 여건을 조성,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자료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특별보고서

본 자료는 몬테레이 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CNS)가 3월 22일 발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관한 특별보고서”(CNS Special Report on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를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관심사항으로 △탄도미사일의 목표지역 △ 북한 미사일 규모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가능성 △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국가 △북한 미사일의 수입국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북한 미사일 개발의 의도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각국의 우려사항 등을 열거하고 그동안 발표된 자료와 연구소 자체의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재래식 및 생화학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체계는 가지고 있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격능력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헌법을 수정해 방어력에 보다 유연성을 갖자는 논의부터 한때 금기시되었던 핵보유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2001년 미국과의 새로운 협정으로 300km까지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조, 배치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계를 도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료원: <http://cns.miis.edu/pubs/week/pdf/060321.pdf>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 미사일 계획과 대량살상무기(WMD) 이동에 대한 북한의 능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과 생화학 탑재물도 이동시킬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핵탄두의 설치가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현용미사일(operational missiles)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정보에 의하면 아직 실험하지 않은 대포동 2호의 사거리가 최근 길어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적어도 상이한 두 종류의 이동형 미사일(mobile missiles)이 개발 중으로 이것이 실현, 배치되면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다.

이 특별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주요 문제에 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에 관한 비확산연구센터(CNS)의 평가를 제시한다. 북한의 크루즈미사일 개발이 위협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1.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어디를 겨냥할 수 있는가?

가) 미 본토에 대한 공격가능성

북한은 현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현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 정보계는 현재 실험하지 않은 2단계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소형 고성능 폭탄, 생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서부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탄두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3단계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이론상 미국의 모든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대포동 2호의 부정확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탄두들은 군사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서부의 일부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핵탄두가 될 정도로 핵무기를 작게 제조하거나 재돌입체(reentry vehicle)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북한이 미 본토에 핵탄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추가적인 발사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2015년까지 미 본토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와 같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나) 일본에 대한 공격가능성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2, 3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미사일은 일본 대부분의 지역(일부 미군기지 포함)에 재래식 탄두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의 상대적인 부정확성을 감안할 때 노동미사일이 핵탄두

를 탑재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군사적 목적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테러용 무기’로 보다 유용하다. 노동미사일은 2~4km의 순환오차확률(CEP)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발사된 노동미사일의 반은 순환반경 밖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확도의 결여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오히려 많은 일본 민간인의 사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두산 1호(대포동 1호)는 2단계 미사일로 1단계는 노동, 2단계는 스커드 변형체이다. 백두산 1호는 일본 어떤 지역도 공격할 수 있지만 이 체계는 노동미사일보다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북한은 소련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S-N-6(R-27)에 기초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포동 X로 알려진 북한 모델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4,000km까지 사거리가 넓어진 육지발진의 이동형 미사일이다. 2004년 7월 남한의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은 엔진실험과 이 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생산, 배치단계에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일본 어느 지역도 공격할 수 있지만 북한은 아직 실험발사를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남한에 주는 위협

북한은 남한의 약 2/3에 달하는 지역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 5호(스커드 B)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6호(스커드 C)를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들은 재래식 탄두와 대량살상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화성 5/6호는 남한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 산업단지, 항구, 20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남한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의 화성 5/6호는 고성능폭탄이나 화학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미사일들은 순환오차확률이 각각 대략 1km와 2km가 될 것 같다. 2005년 5월과 2006년 3월 북한은 소련제 SS-21 Scarab를 개량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KN-02를 시험발사하였다. 북한모델은 100~120km의 사거리를 가진 개량형으로 오산공군기지의 미군시설과 평택의 캠프 험프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미사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북한은 600개 이상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커드 미사일과 200개의 노동미사일 등 8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화성 5호, 화성 6호, 스커드 D 미사일의 개수는 명확치 않다. 스커드 미사일의 생산율은 대략 월 7개에서 9개이며, 노동미사일의 생산율은 월 1개에서 3개 정도이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이동발사기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식수치는 나와 있지 않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백두산 1호를 시험발사하였지만 이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았다. 또한 백두산 1호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사거리를 갖지 못해 거의 전략적 유의성이 없다. 북한 당국은 적은 수(50개 미만)의 SS-N-6 미사일이나 대포동 X 미사일을 배치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 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하지 않고 있다. 대포동 2호도 여전히 연구개발단계로 시험발사하지 않고 있다. KN-02 배치에 대한 공개적인 정보는 거의 없다.

3. 북한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미국과 남한의 군은 북한 미사일의 이동성, 수량, 상대적으로 짧은 발사준비시간 등 때문에 KN-02, 스커드, 노동, 대포동 X(SS-N-6) 미사일들의 위치파악과 파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미사일들은 이동발사에서 발사될 수 있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시설에 숨길 수 있다.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는 미국과 남한의 군이 알고 있는 고정지역에서 발사된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발사지역 근처에 있게 되어 공격에 취약하다.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의 발사준비는 실제 발사하기 최소 하루 전에 연료보급을 위해 고정발사대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정찰위성에 쉽게 간파될 수 있다. 북한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지하시설에 백두산 1호와 대포동 2호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 지하미사일 발사지는 미국과 남한의 첩보에 간파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거의 예고 없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 지하발사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현용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된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해상발진의 크루즈 미사일과 미 공군에 의한 정밀유도무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발진의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하고 있다.

4.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은 누가 제공했는가?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은 해외지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구소련과의 협력은 1960년대에 시작되어 북한에게 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결국 소련의 스커드 B 미사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기와 취득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북한은 1976년에서 1981년 사이 이집트에서 몇 개의 스커드 B 미사일(R-17)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구소련이 1972년에 20개의 스커드 미사일을 그리고 1985년과 1988년 사이에 약 240개의 스커드 미사일을 전달했다는 미확인된 보도도 있다. 화성 5호와 6호는 소련 스커드 B와 C를 모방한 것

이다. 중국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의 이전으로 북한의 초기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 중국과 북한은 600km 사거리의 이동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하였지만, 북한의 기술자들이 미사일 설계와 개발에 관한 약간의 훈련을 받은 후인 1978년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이집트와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서로 협력하였지만 이집트는 이 협력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유럽, 중국, 일본, 시리아로부터 직접, 우연히 혹은 불법으로 미사일 기술이나 부품들을 제공받았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 해체 후 러시아의 미사일 전문기술의 혜택을 보았다.

5. 북한 미사일을 수입한 국가는?

미사일 수출은 북한 정부의 주요 외화획득원이다. 미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2001년에 북한이 중동에 수출한 미사일은 580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근 감소하는 것 같다. 북한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고객은 이란이었다. 1983년 두 나라는 협약을 맺고 북한은 이란에게 미사일 생산시설을 세우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 북한정부는 이동장치(TELs) 및 대함미사일과 함께 200~300개에 달하는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 정부에 판매하였다. 또한 북한은 이란에게 소수의 노동미사일을 공급하였다. 이집트도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기술을 제공받았다. 이집트 정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 정부로부터 스커드 B(화성 5호)의 부품과 생산기술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의 미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노동미사일 체계와 미사일 엔진을 구입하였다. 파키스탄도 북한 미사일과 기술을 구입하였다. 파키스탄의 "Ghauri"는 실제로 개명된 노동미사일이다. 이밖에 북한의 미사일, 미사일 부품, 혹은 미사일 기술을 구입한 나라로는 리비아, 시리아, 예멘이 있다.

6. 북한은 핵무기 지원을 받기 위해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했는가?

보고서들은 노동미사일 체계와 기술에 대한 대가로 파키스탄 정부는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들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을 북한 정부에 제공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1997~98년 기간에 미사일을 전달하였고 파키스탄은 2002년 여름 고농축우라늄 물질과(혹은) 기술을 제공하였다. 일명 '파키스탄 폭탄의 대부'라는 Khan 박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련의 북한 방문시 핵무기 기술 특히 원심분리기를 이전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인가?

북한은 사전 예고 없이 KN-02, 스커드, 노동, 대포동 X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 1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에는 긴 준비가 필요해 미국과 남한 정보망에 간파될 것이다. 과거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도 미국, 일본, 남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기를 조정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를 개발, 배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발사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실험실패(1998년 가장 최근의 실험 때 발생했던 3단계 실패 등)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주저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중국과 남한 같은 주요 지원국가들과 불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1999년 9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지한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회담은 2001년 1월 미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중지되었다. 김정일 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 서명한 '평양선언'에서 북한은 2003년 이후 미사일 실험을 유보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북한 외교관은 때에 따라서 유보는 철회될 수 있고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언급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북한 협상전략의 일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8. 북한 미사일 개발의 저의는 무엇인가?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본래 의도는 미사일을 분쟁시 적의 후방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긴 포의 형태로 보는 소련의 논리를 따르는 것 같다. 북한의 논리는 대규모 전쟁시 화학무기의 사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포의 일부는 화학탄두를 적재했을 것이다. 노동, 백두산 1호, 대포동 X(SS-N-6/R-27), 대포동 2호 같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다른 역할을 한다. 북한은 일본을 위협 속에 둬으로써 향후 분쟁 발발시 북한 미사일이 미군의 일본 기지 사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개입가능성과 핵무기의 사용을 저지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또한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의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원의 하나이다. 과거 클링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수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볼 때 북한은 미사일 계획을 경제지원이나 안보보장을 위해 거래할 수 있는 협상카드로도 간주하고 있다.

9. 중국, 일본, 남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 일본

북한이 1993년과 1998년 노동과 백두산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은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3년 북한은 두 곳에 새로운 대포동 X의 기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기지들은 2004년 5월 70~80% 정도 완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미사일이 시험발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지들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체계가 작동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2003년 이후부터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6년 2월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국간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이 유예를 철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정부는 북한의 수사와 벼랑 끝 외교에 대한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이 과거 일본인 납치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인내심은 약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관계정상화 전에 납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지도부는 군사적 충돌의 경우 일본이 북한 미사일의 일차목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핵탄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은 일본에게 상당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미사일 공격이 임박할 경우 사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개발에 일본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을 수정해 방어력에 보다 유연성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고, 심지어는 한때 금기시 되었던 일본 핵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재개하자는 의견도 있다. 적어도 일본은 미사일 방어력을 키우고 배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나) 미국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과 배치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현 미사일 위력은 미 영토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고 있다. 미실험의 대포동 X(SS-N-6)는 오키나와와 나아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고 미실험의 대포동 2호는 미 본토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단지 소형탄두만을 운반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거리에서는 정확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상을 줄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3단계의 대포동 2호는 미 본토에 보다 큰 탄두 나아가 핵탄두를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미사일 체계의 신뢰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대포동 2호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기습공격을 배제

시킬 정도로 준비기간이 길고, 북한의 발사시설은 미군의 기습공격에 취약하다. 미국의 군 입안자들은 북한 미사일과 중포의 명백한 목표인 일본 및 남한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더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남한에 32,000명, 일본에 47,000명의 군요원을 주둔시키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충돌 시 미사일로 아시아에 있는 미군과 미동맹국들을 목표로 삼아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미 행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북한 정부가 확신할 수 있다는 점을 미 군 입안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탄도미사일로 남한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전공격을 막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에 대한 우려 외에도 미국은 중동 같은 지역에 있는 적대국가들에게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다) 남한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 탄도미사일계획 목표 중의 하나는 남한의 모든 지역을 사거리 내에 두는 미사일 능력을 갖는 것이었다. 남한은 1980년대부터 화성 5호와 화성 6호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었다. 남한은 또한 서울에 고성능폭탄과 화학무기 때문에 막대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일부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을 저지,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8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 체계의 개발을 금지시킨 1979년 미국과의 협정으로 남한의 미사일 개발은 제한을 받았다. 2001년에 남한과 미국은 새로운 협정을 맺어 남한은 300km까지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건조, 배치할 수 있고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한은 그 해 3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였다. 남한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도입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라) 중국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중요한 완충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북중관계는 지난 30년간 상당히 냉각되어 왔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계획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동아시아에 미사일 방어를 배치하는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의

보호까지 확대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에 친 독립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중국정부의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미사일이 대만 독립선언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대만 반대편에 있는 복건성과 저장성에 약 600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이 지역의 무기경쟁과 군사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마) 러시아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 군 관리들은 북한정부의 활동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면 북한에 대한 관련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2003년 중반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한 관리들은 *Izvestiya*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러시아가 판단한다면 러시아의 해상발진 크루즈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지역에 대한 선제공격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러시아의 우려는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방사선 낙진(혹은 의도하지 않은 공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위기 시 러시아가 북한 목표에 개입할지의 여부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군 관리들이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명백히 언급했다는 사실은 만약 북한이 공격자라면 많은 관측통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러시아는 반드시 수동적 관찰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 대 군 관계는 더 이상 단절된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같은 활동을 통해 러시아 군은 미 군대와 합동작전으로 경험을 쌓아 가고 있다. 반면 러시아 관리들은 북한 미사일 기지나 핵 목표지에 대한 미국의 정당성 없는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CNS의 분석)

	사거리 (km)	적재량 (kg)	탄두	CEP (m)	발사기/ 연료	가능 목표지	현황
KN-02(SS-21 Scarab 변형)	100-120	250	재래식	250-300	이동식, 고체연료	남한의 전술 목표물	실험
화성 5호 (스커드 B)	300	987-989	재래식: 핵, 생화학무기 가능	800-1000	이동식, 액체연료	남한	배치, 수출
화성 6호 (스커드 C)	500 (산정)	770	재래식: 핵, 생화학무기 가능	2000	이동식, 액체연료	남한	배치, 수출
스커드 D	700 (산정)	500	재래식: 다른 형태에 대한 정보 무	미확인	이동식, 액체연료	남한	배치, 수출
노동	1000 (산정)	700	재래식: 핵, 생화학무기 가능	2000-4000	이동식, 액체연료	일본	배치, 수출
대포동 X (R-27/SS-N-6)	2500-4000 (추정)	미확인	재래식: 핵, 생화학무기 가능	1000-2000	이동식, 액체연료	일본, 오키나 와, 괌	배치?, 수출?
백두산1호 (대포동 1호: 2단계)	2200 (산정)	미확인	재래식: 핵, 생화학무기 가능	미확인	고정식, 액체연료	일본, 오키나 와, 괌	실험, 배치? 수출?
대포동 2호	5000-6000?	미확인	재래식: 핵, 생화학무기 가능	미확인	고정식, 액체연료	미국	연구개발 표준실험

* CEP: 순환오차확률. 화성 5호(스커드 B)와 화성 6호(스커드 C)의 CEP는 발사실험 자료에 근거. 다른 미사일의 CEP는 신뢰성이 약한 추정치

부문별 주요동향 (2.25~3.24)

1. 대내경제	43
김정일 위원장, 문천금강제련소 방문	43
공장·기업소 절전 운동	43
남포시에 1천여 정보 간석지 개간	43
경제 규격화·표준화 강조	44
김정일 위원장, 삼수발전소 건설현장 현지지도	44
토지관리 지도사업 강화 강조	45
북한신문, 신사고 혁신 촉구	45
의료서비스 향상 강조	45
경제토대 자립성 강화 촉구	46
과학적 경영·기업전략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강조	46
섬유·신발 공장 설비개선	46
자강도 홍주담공장 조업	47
북한 암시장서 1달러 북한돈 6000원	47
물 부족 대책수립 강조	47
2. 농업 및 식량	48
밀보리 파종 한창	48
기상조건 맞춘 영농대책 강조	48
농지전용 금지 강조	49
서해안 평야지대 적합 감자품종 개발	49
내각과 중앙기관 농촌지원 활동	50
WFP 대북 식량지원 논의 진전	50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	50
벼 모판 파종 시작	51
3. 대외경제	51
남-북-러 철도 연결사업 논의 활발	51
북한-스위스 합작 제약사 올여름 수출	52
북한, 중국인 소자본 광산투자 제한	52
북한 온성-중국 투먼, 분기 회담 정례화	53
압록강 '비단도'에 경제특구 추진	53
북·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논의	53
중국 저장성 상인 평양백화점 공동경영	53
중국, 나진항 50년간 사용권 획득	54
북한합작 광산업체, 영국 AIM 상장 추진	55
북한, 다국적 제약사에 연수단 파견	55
철도협조기구(OSJD) 아시아지역회의, 아시아 철도수송 중요성 재확인	56

함북 온성군 남양에 국경시장	56
훈춘에 북·중·러 자유무역지대 추진	57
북한 회령·청진·칠보산 국경관광 재개	57
작년 북·러 교역액 2억달러	57
남북러 TKR-TSR 연결 의장성명	58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 논의	59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59
남북 공동운영 평양 정성 알약품공장 준공	59
정부, 한전·KT에 협력기금 787억원 대출	60
관광공사 금강산대출 상환조건 대폭 완화	60
대북지원 비료 첫 수송선박 출항	61
토공-현대아산, 개성공단에 호텔 설립	61
통일부, 2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61
개성공단 제품 첫 국제전시회	62
개성공단 임금인상 놓고 진통, 4% 인상에 직종별 차등화도 요구	62
포항 신항에 북한 화물선 첫 입항	63
남 기업, 북 광물자원 구입 추진	63
금강산에 연탄보일러공장 착공	64
식량난 해소위해 볍씨뿌리기, 복토, 밀거름 등 새 영농법 전수	64
북한에 10억원상당 의약품 지원	65
경의선·동해선 CIQ 준공	65
남북 왕래·교역 큰 폭 증가	66
북한-러시아 철도 보수 공사에 한국철도공사 참여	66
과학기술부, 남북 협력사업에 6억5천만원 지원	67
옥수수 모판용 비닐박막 북송	67
경기도, 북한 농촌현대화 지원	67
개성공단에 직업훈련센터 설립	68
북한에 9억원 상당 수자원 개발사업	68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진료소 설립	69
5. 북한주변국가 관계	70
일본, 대북 '법집행 분과위' 설치키로	70
북한, 유엔인구기금에 총인구조사 의뢰	70
북한, UNEP에 환경법 개정 도움 요청	71
남북한과 미국, 뉴욕서 비공식 접촉	71
미국여행사, 북한 관광객 많아 성황	72
일본, 대북한 수출 규제	72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북한 관련 부분	73
미국 당국자 개성공단 첫 방문	73
EU, 북한 인권-지원 연계	74
EU, 고려항공 등 블랙리스트 발표	74

1. 대내경제

김정일 위원장, 문천금강제련소 방문

2월 27일 국정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25일 『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정일이 당 부부장 이재일·김동운 등을 대동하고 문천금강제련소(강원 문천)를 현지지도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절실히 필요한 유색금속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 것을 지적하였다”고 전함(『국정원』, 2. 27).

공장·기업소 절전 운동

2월 28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산업현장에 절전 바람이 불고 있다고 『중앙TV』를 인용해 보도. 『중앙TV』는 27일 카드식 적산전력계를 도입, 절전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양제사공장의 사례를 소개하고 “전력소비 기준을 극력 낮추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도. 카드식 적산전력계는 이미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중국의 한 회사와 손을 잡고 작년 10월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를 세워 새 전력계를 대량 생산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소개. 에너지난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은 지역별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화력발전의 발전용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전력낭비 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자급을 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카드식 적산전력계를 도입하거나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송배전망을 직선화하고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도 ‘발전소 없는 전력증산 전략’에 따른 것임. 각 공장, 기업소들이 전력소비가 많은 낡은 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 혹은 개조하는 등 절전형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절전운동 사례로 꼽을 수 있음. 평양제사공장도 낡은 제사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개조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더 늘리고 전력소비는 훨씬 낮추고 있다고 『중앙TV』를 인용해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2. 28).

남포시에 1천여 정보 간석지 개간

3월 2일 『조선신보』는 북한이 평안남도 남포시의 대동강 유역에 1천여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할 계획이라고 보도. 『조선신보』는 평안남도 일꾼과 청년건설자들은 지난해 12월 남포시 도지리와 지사리, 검산리, 서천 지구 일대에 1천여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소개. 이번 공사에서는 간석지 개간과 함께 40여km의 물길과 80여개의 구조물, 10여개의 양수장, 근 30채의 생산건물, 수백 세대의 살림

집도 건설될 계획. 『조선신보』는 “공사는 310여만^m의 흙을 처리하고 9만여^m의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라며 “평안남도 청년돌격대 등 청년 건설자들은 10일 남짓한 기간에 10여만^m의 흙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힘(『조선신보』, 3. 2).

경제 규격화 · 표준화 강조

3월 6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경제 전반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중앙TV』를 인용해 보도. 『중앙TV』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규격제정연구소 현경호 과장의 말을 전함. 현 과장은 “모든 경제 실천 활동에서 과학적인 목표와 방법론을 주는 것이 바로 규격화, 표준화 사업”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규격과 표준에 대한 일반적 개념부터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 또 규격을 “사회경제 생활의 전반 영역에서 최대의 효과성이 나타나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 표준을 “가장 공통적인 것을 반복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한 본보기”라고 설명. 현 과장은 이어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하면 경제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할 수 있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과학과 기술도 발전시켜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 6).

김정일 위원장, 삼수발전소 건설현장 현지지도

3월 6일 『연합뉴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량강도에 건설 중인 삼수발전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건설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인근 철거지역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지적하면서 “철거세대 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택건설을 비롯한 해당한 대책을 미리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그는 “삼수발전소 건설사업은 대공사인 만큼 내각을 비롯한 성·중앙기관과 연관된 부문에서 적극 도와주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 김 위원장의 발전소 건설현장 시찰에는 리제일 당 중앙위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김경호 량강도 당 책임비서, 장용석 혜산시 당 책임비서, 주학심 삼수군 당 책임비서 등이 영접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3. 6).

토지관리 지도사업 강화 강조

3월 8일 국정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7일 『평양방송』을 인용해 “농업성에서는 올해에 농업의 기본생산 수단이며 우리 세대 뿐 아니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귀중한 재부인 토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 토지건설국·농산국·자재국을 비롯한 연관 부서들로 하여금 토지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 이어 “높은 책임성을 안고 나라의 부침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꾸어가기 위해 분발하고 있는 농업성 일꾼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은 토지관리를 잘하기 위한 아랫단위들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국정원』, 3. 8).

북한신문, 신사고 혁신 촉구

3월 10일 국정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9일 『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정일 위원장은 간부들이 고정화된 틀을 깨고 진취적으로 사고하여 모든 사업에서 혁신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나라의 경제 전반이 상승 궤도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내각 간부들이 사고방식·업무태도·사업방법에서 혁신의 된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국정원』, 3. 10).

의료서비스 향상 강조

3월 10일 『민주조선』은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는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며 “인민의 지향에 맞게 의료봉사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해야 한다”고 보도. 신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며 “의료봉사 수준은 의료 일꾼들의 임상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있다”고 지적. 그 방안으로는 의사집단의 자체학습과 기술강습, 임상토론회, 방식상학(시범교육) 등을 제시. 또 “치료, 예방기관에서는 새로운 임상실험 검사법과 기능진단법, 미세 수술법, 방사성 동위원소와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선진적인 진단과 치료방법을 치료, 예방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선진 의료기술 학습을 당부. 이와 함께 “최신 의학과학 기술성과에 기초한 새로운 의약품과 현대적인 의료기구를 대담하게 받아들여 진단과 치료사업을 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촉구. 신문은 나아가 “의료봉사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고려의학(한의학)과 신의학의 결합, 민간요법 체계화, 전문병원 및 전문 진료과목 확대, 전문의 협의제 강화 등을 주문. 『민주조선』은 이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낡은 의료봉사 방식“이라며 왕진과 현장 치료 등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강조(『민주조선』, 3. 10).

경제토대 자립성 강화 촉구

3월 13일 『로동신문』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부문의 개건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이날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는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는 미제의 책동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우리 경제토대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역설. 이어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전력, 석탄, 금속, 기계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부문과 중요공업 부문에서 기술장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준다”고 덧붙임. 신문은 경제부문의 개건 현대화 원칙과 관련, “새출발을 한다는 입장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긴요하고 실리가 있는 대상부터 실현하는 방법으로 다그쳐야 한다”고 제시했다고 보도(『로동신문』, 3. 13).

과학적 경영·기업전략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강조

3월 16일 『로동신문』은 ‘과학적인 경영전략·기업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학적인 경영전략·기업전략을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면서 “경제관리 일군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과 수행방도가 밝혀져 있는 당 경제정책을 연구하여 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은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해 경제조직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경제관리 일군들이 과학적인 경영전략·기업전략으로 일해 나갈 때 사회주의적 원칙이 구현되고 경제건설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로동신문』, 3. 16).

섬유·신발 공장 설비개선

3월 21일 『연합뉴스』는 북한 경공업성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섬유와 신발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평양방송』을 인용해 보도. 경공업성 방직공업관리국은 평양방직공장의 염색과 직포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평양방송』은 전함. 이 방송은 “공장을 방문한 관리국의 일꾼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 또 신발공업

관리국에서는 원산 구두공장과 신의주 신발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방직기계공업관리국에서는 기계공장과 부속품공장의 현대화에 나서 사리원방직기계공장의 생산공정과 평양편직바늘공장에 바늘 생산공정을 새롭게 바꾸고 있음. 경공업성의 비단공업관리국에서는 박천견직공장에 담요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있으며 평양제사공정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3. 21).

자강도 홍주닭공장 조업

3월 22일 『연합뉴스』는 현대식으로 건설된 북한 자강도 홍주닭공장이 조업을 시작했다고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현지에서는 21일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식을 가졌음. 총 건축면적 3만여㎡의 홍주닭공장은 산란실, 부화실, 고기가공실 등 30여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음. 홍주닭은 자강도와 같이 추운 지방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품종으로 1979년에 천연기념물로 등록됐으며 미국 뉴햄프셔 종을 북한 기후에 맞게 개량한 것으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세고 고기 맛이 좋을 뿐 아니라 한해 150여개의 알을 낳는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월 이 공장을 직접 방문, “과학적인 육종체계를 세워 우리 나라(북)의 기후 풍토에 맞은 우량 품종을 많이 얻어내고 사료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3. 22).

북한 암시장서 1달러 북한돈 6000원

3월 22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최근 북한의 암시장 환율이 1달러에 북한 돈으로 종전 3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최근 평양을 다녀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의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융제재조치 여파로 북한이 외화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암시장 환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3. 22).

물 부족 대책수립 강조

3월 22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자원 부족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고 보도. 『중앙통신』은 이날 “인구 한 사람당 돌아가는 물자원량이 연간 5천-1만㎥ 정도 돼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발표 자료에 비춰볼 때 연간 2천900㎥

(290만 ℓ)인 조선(북한)에서도 물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응당한 힘을 넣고 있다“고 전함. 북한 당국은 물자원법과 환경보호법, 토지법, 오염자 지불원칙 등을 마련하고 수자원 보호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 또 수량이 많은 상류에 저수지를 만들고 안변청년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각지에 건설. 이와 함께 일원화된 ‘물지휘 체계’와 합리적인 ‘물조절 관리체계’,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연합뉴스』, 3. 22).

2. 농업 및 식량

밀보리 파종 한창

2월 27일 『연합뉴스』는 『중앙방송』을 인용해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 등 황해남도 연백지구 협동농장에서는 거름을 내고 밀보리를 심고 있으며 강령군과 채령군, 웅진군 등에서도 배수가 좋은 땅을 정해 밀보리 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 평안남도 증산군과 대안군, 강서군에서는 각각 83%, 38%, 36%에 달하는 밀보리 파종 계획된 척률을 보이고 있음. 『중앙방송』은 “황해북도 안의 농촌에서도 거름퍼기와 밭갈이를 적극 앞세우고 씨뿌리기와 묻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하면서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2. 27).

기상조건 맞춘 영농대책 강조

3월 3일 『연합뉴스』는 『중앙TV』를 인용해 기상조건에 적합한 농사대책을 강조했다고 보도. 『중앙TV』는 “3월 상순과 중순에 우리 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약하게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0.7~1도 높아지고 강수량은 평년의 60~80% 정도로 적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함. 북한 최용남 농업성 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3월 하순부터 논벼 씨 뿌리기를 할 수 있도록 모판만들기를 질적으로 해야한다“며 “벼종자 준비와 종자처리장 수리보수를 빨리 결속해야(마쳐야) 한다“고 지적. 그는 옥수수 농사와 관련, “이랑 짓기, 수평 씨레를 잘해 봄철에 예상되는 가뭄(가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 최 국장은 “감자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두벌농사의 앞그루로 재배하는 단위들에서 3월 하순부터는 감자 심기를 할 수 있도록 냉상처리와 싹 틔우기

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3).

농지전용 금지 강조

3월 5일 『민주조선』은 토지개혁법령 발표 60돌을 기념한 사설을 통해 “땅은 식량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의 밑천이며 경제강국 건설의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농업토지는 농사를 제외한 사업에는 일절 쓰지 못한다”고 강조. 신문은 “모든 일꾼들이 부침 땅(경작지)에 건설을 하거나 토지 문제를 제멋대로 처리하는 등 토지법에 저촉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업토지에 나무심기나 건설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토지를 무조건 복구해야 한다”고 밝힘. 또 “농업지도기관에서는 토지관리와 이용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한 치의 땅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토지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이는 사회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 이어 “새 땅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3~4월)에 부침땅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씨붙임(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필지별로 대조, 확인하는 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 신문은 이와 함께 기계화, 규격화 포전 조성, 소석회와 유기질비료 생산, 토지 유실을 막기 위한 둑 쌓기, 각종 농업물자 지원 등을 촉구(『민주조선』, 3. 5).

서해안 평야지대 적합 감자품종 개발

3월 14일 『조선신보』는 북한이 서해안 평야지대에 적합한 감자품종을 개발해 이 지역의 감자농사가 활기를 띠 전망이라고 보도. 북한 농업성 과학기술국과 평양농업대학 과학자들은 8년간의 연구 끝에 서해안 평야지대에 적합한 4가지 다수확품종을 육종했으며 품종별로 과학적인 영농재배 기술공정도 확립. 이번에 개발된 품종 중 ‘울감자6호’와 ‘울감자7호’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다수확품종으로, 역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이 신문은 소개. 또 ‘형산감자1호’와 ‘형산감자2호’는 감자 두벌 재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품종으로 역병에 저항성이 대단히 크다고 설명. 『조선신보』는 “새로 육종된 다수확 품종들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수십 개 농장에 도입돼 그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국가과학원 발명국은 농업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그들에게 발명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힘(『조선신보』, 3. 14).

내각과 중앙기관 농촌지원 활동

3월 14일 『연합뉴스』는 『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 내각의 각 성과 중앙기관들이 농촌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 각 성과 중앙기관에서는 트랙터 부속품 28종 1천200여개와 농기구 20종 7만9천여점 등을 지원했으며 2만4천400여t의 거름을 농촌지역에 전달. 또 수매양정성에서는 평안남도 증산군 신흥협동농장에 나가 비료나 연탄의 원료로 쓰이는 석탄의 한 종류인 니탄(泥炭) 1천여t을 생산해 지원했으며 체신성과 기계공업성도 농사차비에 필요한 물자를 전달. 평안북도에서는 95만5천여t의 거름을 협동벌에 지원했고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20여종의 중소농기구를 농장에 지원.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는 수만t의 거름과 1만2천여점의 농기구를 마련해 각급 농장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3. 14).

WFP 대북 식량지원 논의 진전

3월 16일 『연합뉴스』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제럴드 버크 대변인이 북한 당국과 식량지원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고 보도. 베이징 사무소의 버크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장 자크 그래스 선임 사무차장이 14~16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로마 본부로 돌아갔다”며 “북한 관계자와 협의 결과는 긍정적이고 좋은 진전(good progress)도 있었다”고 밝힘. 버크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조만간 다시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함. 이번에 WFP측이 협상 진전과 함께 ‘계속 협상’의 뜻을 밝힘에 따라 당장 평양 사무소 철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16).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

3월 16일 『조선신보』는 북한이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각지 협동농장에서 농사차비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장들에 물을 넉넉히 대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며 농업성 관개수리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신문은 종합된 자료를 인용,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저수지 및 보조 수원(水源) 담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배이며 양수기, 전동기, 변압기 등 양수동력설비의 수리, 정비도 기본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함. 『조선신보』는 또 2002년 완공된 평남 개천-남포 태성호간 관개수로를

이용해 독좌저수지, 좌영저수지 등 20여 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았다며 전국 9천여 개의 보조 수원에 눈 녹은 물과 빗물을 가둬 영농활동에 사용할 준비를 갖췄다고 밝힘. 이 신문은 “관개수리국 관계자들은 이 수준이면 봄철 농사에서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임(『조선신보』, 3. 16).

벼 모판 파종 시작

3월 21일 『연합뉴스』는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벼의 모판 파종이 시작됐다고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이 방송은 “황해남도의 재령, 연백, 웅진지구를 비롯한 모든 벌에서 벼 냉상모판 씨뿌리기가 시작됐다”며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모내기철에 모를 제때에 보장할 수 있도록 씨뿌리기를 간지게(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소개. 『중앙방송』은 “청단군, 봉천군, 신천군내의 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별 계획을 매일 1.2배씩 해내도록 하고 있다”며 “연안군 천태, 배천군 금성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부식토를 깔고 평당 씨뿌리기 양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온도와 습도보장대책도 철저히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21).

3. 대외경제

남-북-러 철도 연결사업 논의 활발

2월 27일 『연합뉴스』는 러시아 국영 철도사가 남-북-러 간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국영철도 사장은 “우리는 한국과 회담을 갖고 활발히 논의를 진행중이며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힘. 야쿠닌 사장은 “조만간 한국과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극동러시아 항만 방문을 포함한 극동러시아 철도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북한측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덧붙임. 그는 한반도 종단 철도가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유럽과 이어지는 고속 화물컨테이너 노선의 운송기간을 10~12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전망을 양국 전문가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2. 27).

북한-스위스 합작 제약사 올여름 수출

3월 4일 「KOTRA」는 보건성 산하 평양제약공장과 스위스 인터퍼시픽홀딩그룹이 합작해 2004년 평양에 설립한 평스제약합영회사가 올 여름 우량제조기준(GMP) 품질 인증서를 취득해 북한에서 봉사하는 국제 원조기관에 납품하고 해외에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KOTRA에 따르면 평스제약 관계자는 “GMP 조사관들이 실시한 생산기지 조사에서 상품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단지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이 지적돼 이 점만 충족되면 올 여름경 품질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 이 관계자는 “독일, 일본 또는 대만에서 들어온 기계들이 설비돼 있으며 생산기지에 고성능 필터가 부착돼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생산기지 내부의 높은 위생 수준이 보장되고 있다”며 “자체 발전기를 설립해 북한의 불규칙적인 전력공급 문제도 해소,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모든 기술적 준비가 끝났다”고 밝힘. 평스는 현재 ‘평스 스피린’ 등 자체 브랜드의 진통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페니실린을 제외한 항생제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KOTRA」는 소개(「KOTRA」, 3. 4).

북한, 중국인 소자본 광산투자 제한

3월 6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중국인의 소자본 광산 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이 중국인들의 50만위안(약 6천만원) 이하 소규모 투자를 통한 자국 광산 개발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고 말함.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무허가 광산 집중 단속 이후 북한쪽 폐광 개발에 눈길을 돌렸던 중국인 광산업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보도. 30만~50만위안의 소자본으로 북한의 폐광 개발에 참여하려는 광산업자는 물론 이미 투자를 진행중인 업자들도 입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소식통은 “북한 당국의 소규모 투자 제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1월 중국 방문 이후 더욱 심해졌다”면서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했거나 대규모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 소식통은 북한의 대외무역과 관련,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이후 마카오 금융기관의 신용장 개설 중단으로 북한이 무역거래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그는 “북한이 현금이나 현물 교환방식으로 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근래 들어 대외교류 채널을 이원화해 남한과의 거래는 개성공단지역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와의 거래는 단둥(丹東)으로 집중시키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3. 6).

북한 온성-중국 투먼, 분기 회담 정례화

3월 8일 『연합뉴스』는 북한 온성군과 중국 투먼(圖們)시는 최근 분기마다 한차례씩 만나 통관 등에 대해 회담을 진행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길림신문』을 인용해 보도. 『길림신문』에 따르면 두 도시는 회담을 통해 무역, 투자유치 등의 정보 교환은 물론 향후 합작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며 무역과 합작 등에 따른 법률, 법규 등의 문제를 공동해결하기로 했음. 두 도시는 또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3. 8).

압록강 '비단도'에 경제특구 추진

3월 8일 『중앙일보』는 북한이 압록강 하구에 있는 평안북도 '비단도'를 새로운 경제특구 후보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7일 『도쿄신문』을 인용해 보도. 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비단도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향후 이 섬에 금융센터, 주택을 지어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힘. 신문은 이 프로젝트가 올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남부 경제특구 시찰의 산물로 보인다고 전함. 『도쿄신문』은 “중국 측이 신의주 주변의 특구 설치 구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중앙일보』, 3. 8).

북·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논의

3월 9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흑룡강신문』을 인용해 보도. 『흑룡강신문』은 9일 러시아의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북한 경공업성의 초청으로 지카네프 러시아 극동 국립대학 부총장이 지난 6일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지카네프 부총장의 방문 목적이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경제협력에 따른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평양에 북·러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산 경공업 상품점을 개설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함. 러시아측은 이 자리에서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화학비료를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연합뉴스』, 3. 9).

중국 저장성 상인 평양백화점 공동경영

3월 10일 『연합뉴스』는 중국 저장(浙江)성 출신 상인들이 이달말부터 북한 평양

제1백화점 공동경영에 들어간다고 보도. 10일 저장성의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의 동양귀하오(東陽國浩)무역유한공사는 최근 조선칠명(朝鮮七明)무역회사와 평양제1백화점 1~14층을 공동경영기로 합의. 이 회사의 상인 모집 책임자인 루원레이(盧雲雷)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3월말 예정대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음. 동양귀하오는 1단계로 400만위안(5억2천만원)을 투자했으며 공장이 있는 상인들에게 5천위안(65만원)을 받고 평양제1백화점내의 소매점포에 대해 5년간의 경영권을 분양. 백화점은 중국의 중저급 상품을 주로 판매할 예정이며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루씨는 밝힘. 저장성의 『금일조보』(今日早報)는 북한의 개방이 불가피하겠지만 단계적인 개방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동안은 치약, 칫솔, 주방용품, 전기제품 등 일상 소비용품 위주가 될 것이라고 밝힘. 신문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처음 시작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임(『연합뉴스』, 3. 10).

중국, 나진항 50년간 사용권 획득

3월 10일 『조선일보』는 중국이 북한 두만강 유역의 나진항에 대해 50년 동안 개발·사용권을 갖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또 이 개발사업의 배경에는 중·북 간 사회간접자본을 한데 묶으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밝힘. 나진항 개발을 위한 북·중 합자회사인 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 판잉성(範應生) 사장은 최근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가 주관한 ‘두만강 운송로’ 회의에서 나선시 원정리에서 나진항까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시공설계 작업을 완료하고, 시공구간에 대한 실지조사까지 마쳤다고 보고했다고 보도. 판 사장의 회의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은 이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각각 3045만2000유로(약 357억원)씩 투자. 중국은 현금과 기계설비·건축 재료를 투자하고, 북한은 개발권과 5km²의 토지사용권을 합자회사에 양도. 나진항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항목은 원정-나진항 간 67km 고속도로 건설, 나선 시내 5km² 부지 종합개발과 보세가공구역 및 공단 건설, 나진항의 기존 3호 부두 개조 및 4·5·6호 부두 건설, 연간 100만 t 규모의 중개무역, 원정-나진 간 도로변 종합서비스 시설 건설 및 경영 등을 포함. 중국은 첫째 사업으로 원정-나진항 간 67km 도로 중 48km 구간을 고속도로로 개조하는 사업에 착수. 이 개발사업 진행으로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해 동해를 통한 해상물자 운송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조선일보』는 설명. 나진항 공동 개발사업은 중국의 훈춘시 동린(東林)경제무역유한공사와 훈춘변경경제합작구 보세유한공사 등 2개 기업이 북한의 나진시 인민위원회 경제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가 총괄.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북한으로부터 정

식 비준을 받았으며, 대표는 중국인인 판잉성 사장이 맡고 있음. 나진항 공동 개발사업은 중국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판잉성 사장은 보고서에서 “국무원 판공실 제36호 문건(國辦發36호) 24조에서 ‘북한의 도로·항구·지역일체화 건설을 촉진하도록 역외 합작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가는 대외원조를 실시할 때 동북지역 변경통상도시의 교통·항구·비행장 등 기초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힘. 중국 국무원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식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것이 처음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은 지린·랴오닝(遼寧)·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지방과 북한을 한데 묶는 개발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중국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나진항 개발뿐 아니라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철도와 고속도로를 정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며 “중국이 사회간접자본 통합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임(『조선일보』, 3. 10).

북한합작 광산업체, 영국 AIM 상장 추진

3월 11일 『연합뉴스』는 북한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광산기업이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 상장을 추진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된 광산기업 코메트(Kormet)의 루디 시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로이터와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9월 AIM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월 중 주간사 선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시르 CEO는 “여러 투자은행과 주간사 계약 체결에 대해 논의했으며 희망 업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함. 또 그는 주간사 선정 과정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은행들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것이며 그 시기는 한두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임(『연합뉴스』, 3. 11).

북한, 다국적 제약사에 연수단 파견

3월 13일 『연합뉴스』는 최근 북한이 제약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에 연수단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12일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1월말 연수단 10명을 스위스의 세계적인 제약회사 노바티스 본사에 파견, 세계 제약시장의 신기술 동향과 제약 공장 건설 기법 등을 배워갔음. 북한이 이처럼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다국적 회사에 연수단을 파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이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의약품난으로 주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2년내 기초 의약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연합뉴스』는 분석.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보건성 관리와 제약분야 전문가, 통역요원으로 구성된 파견단은 스위스 바젤에 2월 초까지 머물며 강의와 공장 견학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운 것으로 「연합뉴스」는 파악. 제약업계 관계자는 “북한이 의약품 자급자족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으나 제약 기술을 하루 아침에 금방 터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남측에 제약 기술과 시설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연합뉴스」, 3. 13).

철도협조기구(OSJD) 아시아지역회의, 아시아 철도수송 중요성 재확인

3월 14일 「조선신보」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철도협조기구(OSJD) 아시아지역회의 참가국 대표들이 지역 철도수송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보도. 신문은 “조선(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 사이의 대외무역 화물수송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회의는 대외무역 확대를 뒷받침하는 철도운수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힘. 이번 회의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6개국 철도대표단이 참가해 2006년도 대외무역화물 수송량에 합의. 「조선신보」는 특히 각국 대표들이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도스티크-알라산코우 철도역을 통한 화물수송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힘. 「조선신보」는 지난해 이 역을 이용한 화물은 1천100만t을 넘었고 이 가운데 900만t은 중국을 경유해 타지역으로 들어갔으며, “도스티크-알라산코우 철도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이 통과하는 주요 철도수송 통과지점의 하나”라며 회의 결과 올해 1천350만t 이상의 화물이 이 역을 경유할 전망이라고 소개(「조선신보」, 3. 14).

함북 온성군 남양에 국경시장

3월 16일 「연합뉴스」는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에 올해 안에 북·중 변경지역 주민을 위한 대규모 시장이 설립된다고 「길림신문」을 인용해 보도. 「길림신문」은 16일 지린(吉林)성 검사검역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린성 정부는 투먼(圖們)통상구 맞은 편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 구역에 중·조변경지대 주민 무역구역을 설립한다”고 전함. 신문은 “지린성과 함경북도가 현재 시장 설립에 따른 규모, 거래 물품 등 세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이 생기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신문은 이어 “이번 시장 설립은 투먼시 인구유동을 이끌 뿐 아니라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와 지린성 수출 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북한 자원 및 한국, 일본의 선진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는 데 유리하며 지린성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두만강 지구의 국제협력개발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북한을 비롯한 러시

아, 일본 등과 다변무역을 진행하는 투먼통상구는 도로와 철도가 북한과 통하는 유일한 국가통상구로, 제3국인이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통상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16).

훈춘에 북·중·러 자유무역지대 추진

3월 16일 『조선일보』는 북한과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3국의 자유무역지대가 각각 조성된다고 보도.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변경경제협력구 쉬룽(許龍) 부주임은 “먼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각각 훈춘과 하산에 일정 범위의 봉쇄형 관리 구역을 만들어 교통·운수·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항만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홍콩신보』를 인용해 『조선일보』는 밝힘.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접경도시인 만저우리(滿洲里)에서 운영 중인 ‘공동무역구’와 비슷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구역에서는 통상적인 관세 감독관리가 면제되고 양국 상품이 면세로 통관될 수 있으며, 제삼국의 화물과 사람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고 『조선일보』는 소개. 북한 쪽에서는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에 자유무역구가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쉬룽 부주임은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는 양국 무역을 늘리기 위해 도로와 항만을 연계 개발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힘. 중국은 나진항 개발에 참여하며 이 지역에 대해 50년 동안의 항만시설 경영권과 인근 지역 공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임(『조선일보』, 3. 16).

북한 회령·청진·칠보산 국경관광 재개

3월 16일 『연합뉴스』는 한때 중단됐던 북한의 회령, 청진, 칠보산에 대한 중국인 대상 국경관광이 지난 9일 재개됐다고 『연변일보』를 인용해 보도. 『연변일보』는 이들 북한 3개 지역에 대한 국경관광 재개가 연변 해란강여행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실현됐다고 전함. 청진과 칠보산은 지난해 8월 북한이 관광통행증을 바꾸면서 중단됐고 12월 말에는 회령 관광 길까지 막혔음. 이 신문은 1990년대 초 중국 여행사로서는 최초로 이들 3개 지역 관광코스를 개발한 해란강여행사는 북한 칠보산국제여행사와 협상 끝에 독점적인 국경관광을 재개하도록 허용받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16).

작년 북·러 교역액 2억달러

3월 17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러시아의 작년도 교역액이 약 2억달러에 달한 것

으로 나타났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을 인용해 보도. 이 방송은 17일 북·러간 경제·무역협조협정 체결 57주년을 맞아 “두 나라 사이의 상품유통도 현저히 확대됐다”며 “2004년에 1억4천600만달러에 달했다면 지난해에는 약 2억달러로 늘어났다”고 소개. 이 방송은 “최근 조선(북)의 5개 공업대상과 합영기업 창설에 대한 협정이 체결됐다”며 함경북도 웅기원유가공종합기업소와 청진제강연합기업소, 평양베아링공장, 축전지공장, 평양화력발전소 등을 적시. 방송은 “라진에 자유경제지대를 창설하는데 러시아의 자본을 투자할데 대한 문제와 웅기에서 코크스탄 매장지 공동개발, 조선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에 대한 문제도 토의되고 있다”고 전함.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조선과 연해주 지역에 합영기업을 창설할데 대한 구체적인 협정들이 체결됐다”며 “아무르주에서 조선 전문가들에 의한 콩과 남새(채소)재배, 연해주에서 해산물 양식, 극동에서 여관 및 주택건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도 채택됐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3. 17).

남북러 TKR-TSR 연결 의장성명

3월 19일 『연합뉴스』는 남북한과 러시아 3국 철도 운영자가 TKR(한반도중단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 이철 철도공사 사장, 김용삼 북한철도상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 사장은 19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나홀에 걸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성명을 통해 TKR-TSR 연결에 3국이 공동 협력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실무운영자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힘. 남북러 3국 철도운영자들은 지난 1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열린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협의회(CCTT)회의와 이틀 일정의 이르쿠츠크 회의 등 나홀에 걸친 긴밀한 접촉을 통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점을 찾았음.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남북러 3국 회의는 그동안 한국측이 TKR-TSR 연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뿌린 씨앗들이 드디어 싹을 내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 남북러 3국 의정서는 TKR-TSR 연결문제와 관련 그동안 이뤄졌던 전문가, 학자 차원의 협의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무운영자들간 정례적인 회의를 갖도록 했음. 이번 남북러 3국 철도운영자회의를 성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러시아 철도공사는 남북러 3국 실무운영자 회의의 의장국을 맡게 됐음. 이번 회의에서 북한측은 이례적으로 김용삼 철도상을 비롯해 철도 및 외교 등 핵심 부처 국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이철 사장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TKR-TSR 연결 문제가 비록 한반도 정세 등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남북러 3국 철도회담을 통해 그동안 3국이 기울여온 노력들이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연합뉴스』, 3. 19).

북-중 국경무역 활성화 논의

3월 24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23일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지린성 대 조선(북한) 경제무역 합작좌담회’를 마련하고 국경무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연변일보』를 인용해 보도. 『연변일보』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리용남 무역성 부상과 중국 상무부 및 지린성 관계자가 만나 양국의 무역현황을 소개한 뒤 지린성 투먼(圖們), 함경북도 남양 등지에 6개의 국경 자유무역시장을 설립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 특히 북한은 이번 좌담회에 리 부상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12명을 보내 큰 관심을 보였음. 리 부상은 이 자리에서 북·중 변경무역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했다며 “이후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면 그 전망이 더욱 밝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상호 무역구 설치 문제에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면서 양측이 자주 만나 상호 관심사를 깊이 논의하기를 기대. 이어 지린성 대표는 북한이 올해 ‘제2회 동북아 국제박람회’에 주최측으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 리 부상은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 신문은 밝힘(『연합뉴스』, 3. 24).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남북 공동운영 평양 정성 알약품공장 준공

2월 27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대표적인 의약품 생산시설인 정성제약연구소가 남측의 시설·기술지원으로 최첨단 제약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도. 정성제약연구소는 27일 오후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승리1동 연구소 제약공장내에서 알약품공장 준공식을 갖고 항생제, 해열제 등 기초의약품에서 전문치료제에 이르기까지 60여종의 약품에 대한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 이날 준공식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 강문규 상임대표와 이영동 공동대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 농협중앙회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이사, 통일교육원 박영규 원장 등 남측 인사 100여명과 정성제약연구소 전영란 소장 등 북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 이날 준공된 알약품공장은 타정기(알약을 찍어내는 기계), 계수기(알약을 병단위로 자동 포장하는 기계), 4면 포장기(4면을 동시에 밀폐하는 포장기계) 등 현대식 설비를 갖추 알약·캡슐·과립 등의 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포장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췄음. 총부지면적 4만8천㎡, 연건축면적 1만5천㎡인 정성제약연구소는 우리민족에서 지원한 수액약품공장 2천500㎡, 알약품공장 2천100㎡를 비롯해 병주사 제공장, 유로키나제공장, 고려의학공장 등이 운영되고 있음.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정성제약연구소에 지원을 해오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2년여의 공사 끝에 27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9일 북한 최초로 GMP(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정성수액약품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15억원을 들여 이날 알약품공장을 준공.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연내 알약공장에 6억원, 품질관리실 5억원, 동물실험실 2억원, 수액공장 2억원 등 모두 15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약품 원료 혼합에서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힘(『연합뉴스』, 2. 27).

정부, 한전·KT에 협력기금 787억원 대출

2월 27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를 앞두고 전력 및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한전·KT에 787억원을 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168차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한국전력과 KT가 설비 확충을 위해 각각 신청한 410억원과 377억원의 대출 신청을 심의, 의결. 대출조건은 7년 거치 13년 상환에 연리 2%임. 이에 따라 한전은 배전방식으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만5천kW를 공급하던 전력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0만kW를 공급할 수 있는 문산-개성 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착공할 예정. 또 KT도 현행 243회선인 통신선로를 1만회선 규모로 확충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2. 27).

관광공사 금강산대출 상환조건 대폭 완화

2월 27일 『연합뉴스』는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금강산사업과 관련, '연리 4%,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2001년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한국관광공사가 상환조건을 '연리 2%, 1년거치 10년상환'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보도. 통일부 당국자는 "관광공사가 현재 수익구조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대출조건 변경을 요청했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와 회계법인의 연구용역 및 현장조사를 통해 대출조건 변경요청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거친 결과, 4%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건변경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 정부는 또 내년에도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올해 100억원이 넘는 원리금을 갚아야 했던 관광공사는 일단 상환시기가 유예

되는 동시에 내년에도 원금 30억원과 이자 16억원 등 46억원만 갚으면 된다고 통일부측은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2. 27).

대북지원 비료 첫 수송선박 출항

2월 28일 『연합뉴스』는 올 대북지원 비료 첫 수송선박이 28일 출항했다고 보도. 3천900t급 국적선 ‘파이오니아 코나(PIONEER KONA)’호는 이날 오전 10시 남해화학에서 생산한 복합비료 6천t을 싣고 여수 낙포부두를 출발,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으며, ‘파이오니아 코나’호는 3월 2일경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임. 이날 수송된 비료는 정부가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봄철 비료 15만t 가운데 첫 항차분이라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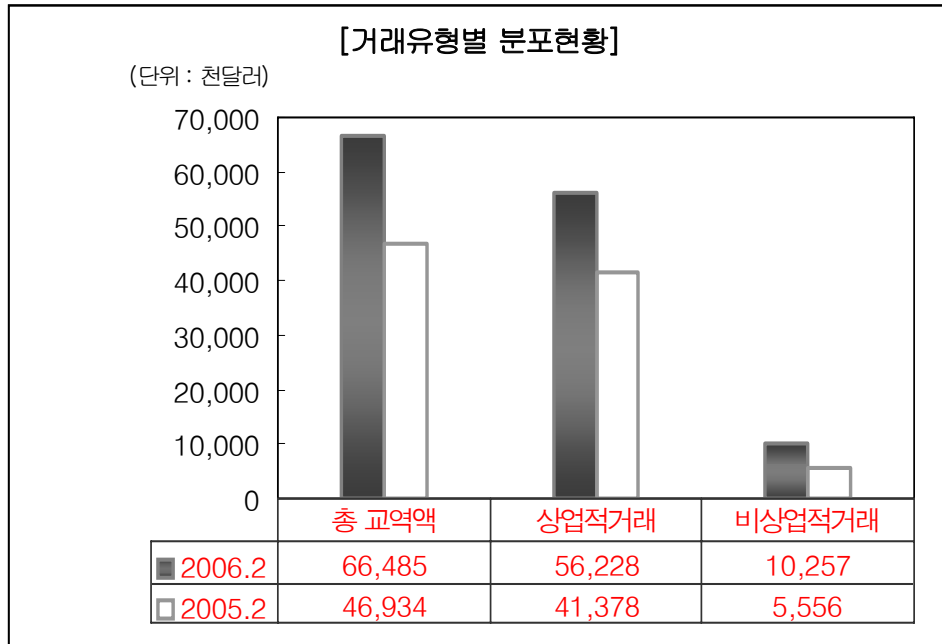
토공-현대아산, 개성공단내 호텔 설립

2월 28일 『국민일보』는 내년 상반기 중 개성공단 내에 특2급 시설의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선다고 보도. 한국토지공사는 28일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개성공단 단지 내에 객실 100개와 음식점 오락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연면적 2000평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짓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힘. 토공은 4월 13일까지 민간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같은 달 21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 이전에 호텔을 개장할 계획. 이 호텔의 전체 자본금은 70억원으로 토공과 현대아산이 40억원을 출자해 현지 법인을 먼저 설립하며, 나머지 30억원(43%)은 민간업체가 출자. 숙박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개별 법인 또는 컨소시엄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음. 토공 관계자는 “개성공단 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후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시장 기능이 정상 가동되는 시기에는 현지 법인의 토공 지분을 민간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일보』는 덧붙였다(『국민일보』, 2. 28).

통일부, 2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3월 2일 『통일부』는 2월중 남북교역액이 66,485천달러로 전년 동월 46,934천달러 대비 41.7% 증가했으며 반입은 28,418천달러, 반출은 38,067천달러에 이른다고 발표. 이중 거래비중은 상업적 거래가 56,228천달러로 84.6%, 비상업적 거래가 10,257천달러로 15.4%를 차지. 주요 반입품은 섬유류 39.2%, 농림수산물 23.6%, 철강·금속제품 17.7%, 광산물 6.0%, 전자전기제품 3.9% 등이며 반출품목은 섬유류 21.4%, 기계류 17.8%, 철강금속제품 14.3%, 광산물 12.2%, 전기전자제품 9.3% 등이라고 밝힘(『통일

부」, 3. 2).



개성공단 제품 첫 국제전시회

3월 2일 『매일경제』는 국제전시회에 '개성공단 홍보관'이 처음으로 설치된다고 보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4월 5~8일 상하이마트에서 열리는 화섬·패션 전시회인 '프리뷰 인 상하이 2006'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만으로 홍보관을 구성. 개성공단 홍보관에는 신원, 좋은사람들, 평화유통, 제이슨상사 등 10여개 업체가 개성에서 만든 제품이나 생산 예정 제품을 전시할 예정임. 섬산련 관계자는 "국제전시회에 개성 제품을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며 특히 중국이 북한과 가까운 점을 활용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매일경제』는 덧붙였다(『매일경제』, 3. 2)

개성공단 임금인상 놓고 진통, 4% 인상에 직종별 차등화도 요구

3월 7일 『연합뉴스』는 북측이 처음으로 개성공단 종업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 더욱이 이번 움직임은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일당 계산방식을 변경한 데 이어 나타난 것이어서 입주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직장장들은 현행 월 50달러인 최저노임을 4% 인상해 달라는 입장을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통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함. 이는 북측이 2003년 9월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5조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되,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합의해 전년의 5%까지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시범단지에 입주한 15개 기업 중에는 지난해 가동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되거나 아예 아직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아 일괄적인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북측은 또 직종에 따라 종업원 임금을 차별화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노동강도가 센 일부 직종에 대해 추가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라고 『연합뉴스』는 해석.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 “협상중인 사안인 만큼 정부는 입주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기업 부담이 크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7).

포항 신항에 북한 화물선 첫 입항

3월 7일 『연합뉴스』는 경북 포항 신항이 개항된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국적의 화물선이 대북지원 비료를 싣기위해 입항한다고 보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북한 국적의 화물선 구룡호(5천43t급)가 대북지원 비료를 수송하기 위해 오는 12일께 포항 신항부두에 입항한다고 7일 밝힘. 포항 신항에 입항하는 구룡호는 지역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5천t을 선적한 뒤 오는 18일께 북한 홍남항으로 출항할 예정임. 이 배에는 북한 선원 24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포항 신항이 1962년 6월 12일 개항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 선원이 외국적 선박에 승선 입항한 적은 있었으나 북한 선박과 선원이 동시 입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7).

남 기업, 북 광물자원 구입 추진

3월 11일 『조선신보』는 북한당국이 최근 광물 등 지하자원 개발분야에 큰 힘을 쏟고 있다면서 “국내(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북남 사이의 협력사업 차원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 이에 따라 “북측과 남측은 합영 등의 방법으로 북측의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무협상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힘. 신문은 특히 포스코가 무산광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10만t을 구입할

계획이며 대주산업은 시멘트용 석회석 100만t, 남해화학은 인회석 100만t, 한국공구조합은 텅스텐 구매 의사를 밝혀 북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소개. 또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함경남도 단천시의 대홍마그네사이트광산 및 검덕아연광산과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북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3년 정도 후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광물자원 개발현황』 2월호를 인용해 보도. 이 공사는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외에도 인회석, 철광석, 몰리브덴, 중석광산에 대한 개발을 협의 중에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신문은 이어 최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 북한의 무진장한 광물자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미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덧붙임(『조선신보』, 3. 12).

금강산에 연탄보일러공장 착공

3월 13일 『연합뉴스』는 (사)새천년생명운동 김홍중 이사장이 이달 25일 금강산 온정리 소재 연탄보일러공장 착공식을 준비중이라고 보도. 그는 “한겨울에도 땀감을 찾아 해매는 북한의 소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자그마한 불씨 하나는 그들의 땀방울 마음을 녹이고 통일로 향하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 김 이사장은 “왜 연탄보일러 보급 운동을 펼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분별한 벌목으로 난방연료를 구입하는 한 북한의 산림황폐화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는 보일러 공장 운영방식에 대해 “남한에서는 별도의 인력이 파견되지 않는다”면서 “남측에서 공장건물과 시설을 제공하면 온정리 주민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한다”고 밝힘. 보일러공장은 온정리 주민 50명을 고용해 연탄보일러를 연간 5천대 규모로 생산하며 고용된 주민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금강산관광총회사측에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연탄보일러를 현물로 전달할 예정. 보일러공장은 대지 2천평에, 건평 200평 규모이며 그동안 남측 관광객들의 접근이 금지됐던 온정리 마을에 설립. 보일러공장 착공식에는 남경필, 정문헌, 박세환, 배일도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변재일, 최재천, 안민석, 김재윤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홍건표 부천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13).

식량난 해소위해 범씨뿌리기, 복토, 밀거름 등 새 영농법 전수

3월 14일 『연합뉴스』는 15년째 대북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민족복지재단(대표 김형석)이 올해부터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노동력과 농업자재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복토직파 영농법’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 복토직파 영농법은 못자리와 모내기를 따로 하는 기존의 파종방식 대신 밭아된 범씨와 규산질 비료

를 나란히 뿌리면서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수확량도 2배 이상 늘릴 수 있음. 복토 직파기를 통해 경작을 하면 대당 2만ha에서 6만ha로 세배 가량 단위 면적을 늘릴 수 있으며 건답, 습답 가리지 않고 1인당 하루 1만평까지 직파가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 선진 농법에 해당하는 복토직파 영농법은 그동안 북한에서 한 차례도 시도되지 않았고 한민족복지재단과 농업진흥청이 지난해부터 북한 농업성 등과 준비작업을 벌여왔음. 이 단체는 15일 평남 숙천군 약전리에 소재한 협동농장에 농업전문가 8명을 파견해 복토직파 영농법에 대한 농업기술을 우선 전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3. 14).

북한에 10억원상당 의약품 지원

3월 15일 『연합뉴스』는 대북의료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대표 인세반)이 평안남도 남포시 항구구역 인민병원 등에 1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 유진벨재단은 “올해 상반기 지원물품을 이르면 금주 말에 인천-남포 정기운항 화물선인 트레이드포춘 호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다”면서 “물품은 45개 인민병원과 결핵 예방원, 결핵요양소 등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함. 이번 지원물품에는 1만800여명분의 결핵약과 응급진단세트 등이 포함됐다고 단체는 설명. 유진벨재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물품배분이 완료될 내달말께 6명이 입북해 물품 확인 및 환자 상담을 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3. 15).

경의선·동해선 CIQ 준공

3월 15일 『연합뉴스』는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의 우리측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정식으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 정부는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출입시설에서 각각 준공식을 가졌음.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반도 1일 생활권 시대도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무엇보다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회담이나 행사들도 이 출입시설을 통해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이 장관은 이어 남북 간 합의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 완공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의 개통식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의 개통을 촉구. 2004년 9월 착공한 경의선 CIQ는 5천290평 규모, 같은 해 6월 공사에 들어간 동해선은 4천252평 크기이며 모두 지상 2층에 지하 1층으로 지어졌다고 『연합뉴스』는 소개. 경의선의 경우 본건물 외에도 입출경 게이트 2곳과 입출경 분소 2곳, 화물입출경 분소 및 게이트 2곳, 세관창고, 차량검사소 등 부속시설 10동이, 동해선은

입출경계이트 2곳이 부속시설로 각각 설치. 공사비로 경의선에 425억원, 동해선에는 548억원이 투입. 이번 완공에 따라 경의선은 연간 170여만명, 동해선은 260여만명에 대한 출입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북 출입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특히 경의선에는 무선인식(RFID)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인원 및 차량 통행과 전략물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3. 15).

남북 왕래 · 교역 큰 폭 증가

3월 16일 통일부는 올 들어 남북 사이의 왕래 인원은 90% 가까이 증가하고 교역 실적도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1~2월 남북 왕래인원은 1만2천84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6천788명에 비해 89.3% 증가. 특히 2월에는 7천129명이 왕래, 작년 2월의 3천42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이 가운데 북에서 우리측을 다녀간 인원은 33명이며 나머지 7096명은 우리측 인원임. 이와 함께 1~2월 남북교역액은 1억2천959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9천565만달러에 비해 35.5% 증가. 이 가운데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 3천32만달러, 위탁가공 4천53만달러, 경제협력 3천853만달러 등 모두 1억937만 달러였음. 이런 증가는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되고 위탁가공 교역과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분석(『통일부』, 3. 16).

북한-러시아 철도 보수 공사에 한국철도공사 참여

3월 18일 『중앙일보』는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과 러시아 국경도시 핫산을 잇는 55km 구간의 철도 보수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보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17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용삼 북한 철도상,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국영철도 사장과 회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철도공사 관계자가 밝힘. 이 관계자는 “남북한과 러시아는 철도 보수사업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며 “재원 조달 방법과 남·북·러 3국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야쿠닌 러시아 국영철도 사장도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3국은 한반도종단철도(TKR)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경-나진 구간 철도를 개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북한과 러시아는 2004년 7월 양국 철도 실무자 회의에서 선로가 노후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나진-핫산 구간 철도를 개·보수하기로 합의한 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은 진전될 것으로 예측. 현재 러시아 극동 나홋카의 보스토치니항은 물동량이 포화상태

여서 철도 보수가 끝나면 유럽으로 가는 동북아 국가 화물의 상당부분이 나진항으로 옮겨갈 전망이라고 『중앙일보』는 덧붙임(『중앙일보』, 3. 18).

과학기술부, 남북 협력사업에 6억5천만원 지원

3월 19일 『연합뉴스』는 과학기술부가 2006년도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분야는 남북 과학기술공동연구 및 조사사업, 남북과학기술 인력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남북과학기술 정보 및 동향분석 등으로 전문가 평가와 전문기관 종합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 과기부는 그동안 남북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북한 적응형 슈퍼 옥수수 개발 및 종자 보급(경북대)’, ‘컴퓨터 요원양성 및 시범협력사업(포항공대)’, ‘북한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연합뉴스』, 3. 19).

옥수수 모판용 비닐박막 복송

3월 19일 『연합뉴스』는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이 옥수수 모판용 비닐박막을 북측에 지원한다고 보도. 옥수수재단은 19일 “옥수수 농사에 필요한 비닐박막 5억 원 어치를 북한에 지원한다”면서 “8일 1차분 복송에 이어 22일 2차분 화물트럭들이 서울에서 개성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힘. 단체 관계자는 “비닐박막은 북한의 옥수수 농사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면서 “이번 지원으로 북한 옥수수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단체는 1998년 5월부터 북한 농업과학원과 함께 북한지역 25개 시험연구소와 경북 군위 경북대 부속농장 등에서 슈퍼옥수수 개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3. 19).

경기도, 북한 농촌현대화 지원

3월 20일 『연합뉴스』는 경기도와 북한간에 남북공동 벼농사를 포함해 ‘북한 농촌현대화’를 위한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보도.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김성식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부회장 정덕기)측과 ‘남북협력 북한 농촌현대화 사업’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힘. 이번 합의서 체결로 경기도와 북측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평양직할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남북 공동 벼농사재배와 더불어 농업 인프라 조성

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 특히 이번 합의는 종래의 단순한 물자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농촌현대화를 직접 돕는 변형된 형태의 '새마을운동'으로 향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2일 비닐하우스 육묘장 설치를 위한 기술진을 방북토록 해 현지에서 2주간 작업을 하고 벼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및 장비 등을 이달 하순 북으로 운송,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특히 벼농사 합작사업은 면적을 지난해 전체 3ha에서 올해는 100ha(30만평)로 확대하고 당곡리 주민들과 공동으로 벼농사를 짓기로 했음. 파종될 벼 종자는 남측의 오대벼와 북측의 평도 15호가 절반씩이며, 재배방법은 경기도 재배법을 적용. 또 벼농사와 더불어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농업용 지하수 개발, 건조장 및 도정공장 건설, 비닐하우스 육묘장(3천600평) 설치 등 농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병행. 이와 함께 마을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및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탁아소, 병원 등을 보수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등 생활개선사업도 추진. 경기도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설비와 장비, 기자재를 제공하고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북측은 노동과 건설 등에 필요한 골재 등 자재를 제공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3. 20).

개성공단에 직업훈련센터 설립

3월 20일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가 2007년께 설립된다고 보도. 노동부는 23일 개성공단에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북측 당국과 체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힘. 노동부는 개성공단내 부지 7천여평에 3층 규모로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5월말 또는 6월초에 착공식을 가질 계획. 이 직업훈련센터는 봉제와 기계 등 13개 직종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연간 4천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센터의 훈련강사 양성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을 5월께 중국 대학에 파견, 김일성 대학 등 북측의 우수대학 출신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아울러 노동부는 직업훈련센터 이수자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과 함께 국내 노동법에 따른 노무관리 기법도 전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3. 20).

북한에 9억원 상당 수자원 개발사업

3월 22일 「연합뉴스」는 대북 지원단체인 기아대책(회장 정정섭)이 올해 북한 현

지에서 9억원 상당의 수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지난해 6억3천500만원 규모의 지하수 개발에 이어 올해 지하수 시추공사와 함께 정수기 및 소독약 지원 등 '식수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함. 단체는 북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 건강한 식수생활 환경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수자원개발 및 정수·소독사업(2004~08)을 계속하고 있음. 올해는 이미 염소소독약 60t을 지원했으며 평양시 강남군의 벼 육묘공장과 비닐하우스의 지하수 개발에 이어 황해북도 봉산군의 젖염소공장에 지하수 정수기를 제공할 계획. 기아대책 고재필 팀장은 "북한에서 수자원 개발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라며 "올해는 지하수 시추 뿐 아니라 정수시설과 오·폐수 처리까지 수자원 개발의 다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3. 22).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진료소 설립

3월 24일 『문화일보』는 남한과 북한의 의사들이 한공간에서 남북측 환자들을 공동 진료하게 된다고 보도. 북한 개성공단 내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는 북측에 남북공동진료소 개설을 제의해 양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힘. 그린닥터스가 계획중인 남북공동진료소는 현재의 개성병원 외에 개성공단내 100평규모의 공간을 마련해 남측과 북측 의사가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되 일부 시설은 공유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다고 『문화일보』는 소개. 그린닥터스 정근(안과전문의) 사무총장은 "진료실, 입원실, 휴게실, 치과 등은 별도공간을 사용하면서 넓은 공간의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X레이 및 초음파 촬영실, 수술실,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해 남북 환자들의 효율적인 진료와 자연스러운 접촉을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그린닥터스는 남측과 북측이 의사와 간호사 각각 4명씩, 행정인력 각 2명 등 모두 12명의 인력이 상주하는 계획을 수립중임. 진료과목은 응급진료를 포함해 치과, 내과, 외과, 안과 등임. 정 총장은 "북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최대한 빨리 일을 추진, 오는 6월말까지 진료소 공사를 마무리 짓고 7월부터는 공동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 정 총장은 "현재 수천명의 북측 근로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성종합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동진료소 운영은 이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남북 의사들이 공동진료해 의료분야에서 부터 남북이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덧붙임(『문화일보』, 3. 24).

5. 북한·주변국가 관계

일본, 대북 '법집행 분과위' 설치키로

3월 5일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가 대북 압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북 불법수출 차단과 출입국관리, 밀수 적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납치문제전문간사회에 '엄격한 법집행 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 경제제재 발동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현행법 적용을 강화해 압박 강도를 높임으로써 납치 문제 등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새로 설치될 분과위는 경찰청, 재무, 법무, 경제산업, 금융, 해상보안청 등 6개 중앙부처의 심의관 및 부장급으로 구성. 단속을 담당하는 부처가 정보를 공유,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람과 물건, 자금의 대북 불법교류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임. 예컨대 재무성과 법무성은 입국관리와 세관에 인력을 중점 배치해 북한 관계자와 휴대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이를 위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북한 관련 범죄수사경험이 있는 경찰 등을 입국관리국과 세관에 파견하거나 검임 근무 시키기로 했음. 경제산업성은 외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기를 취급하는 일본 국내기업 약 100개사에 대한 불시검사를 연내에 실시할 방침임. 금융청은 북한 관련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의혹이 있는 거래를 수사당국에 통보키로 했음. 또 해상보안청은 보안관을 늘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입항검사를 엄격히 실시하는 한편 각성제 거래와 밀수적발을 위한 해상순찰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3. 5).

북한, 유엔인구기금에 총인구조사 의뢰

3월 5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FPA)에 내년도 총인구조사를 의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해 보도. 북측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UNFPA 기술지원센터는 자문관 1명을 이미 선정해 놓았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인구조사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 사전조사를 거쳐야 내년도 총인구조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되며 UNFPA 자문관의 방북경비는 북측에서 댈 예정.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내년 인구조사를 하게되면 지난 1993년 이후 14년만에 처음 실시된다”며 “2005년 현재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발표한 북한의 인구는 2천248만명인 것으로 미뤄 14년전 실시한 총인구수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3. 5).

북한, UNEP에 환경법 개정 도움 요청

3월 6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최근 UNEP(유엔환경계획)에 환경보호법 개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자유아시아방송」은 6일 북한 대표단이 지난달 중순 태국 방콕의 UNEP 사무소를 방문해 국제규약에 맞는 환경보호법 개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태국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전함. 또 북한은 지난달 네팔과 부탄에도 관련 대표단을 파견해 산림 관리와 보호 실태를 시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밝힘. 북한이 환경보호법 개정을 위한 시찰단을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에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 참여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조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덧붙임. 북한은 1986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5년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1998년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올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채택해 국토 및 도시계획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또 지난해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UNEP와 세계보호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지구 온난화 방지와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활동도 펴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연합뉴스」, 3. 6).

남북한과 미국, 뉴욕서 비공식 접촉

3월 7일 「연합뉴스」는 남북한과 미국이 6일(현지시간) 리군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과 위성락 주미공사, 미 국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맨해튼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위폐 논란 및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 리 국장은 이날 민간 싱크탱크인 전미외교정책회의(NCAFP)가 주선한 세미나에 참석, 위 공사 및 미 국무부 관계자와 위폐 논란 등 미북간 현안에 대해 협의. 세미나를 마친 뒤 리 국장은 “양쪽(북·미) 모두 솔직하게 얘기했다”면서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으나 6자회담 재개와 위폐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리였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이와 관련, 위 공사는 비록 정부간 공식 협상자리는 아니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이해를 높이는데 유익했다”면서 “북한도 미국 생각의 흐름을 알게 됐을 것이고 미국도 북한의 최근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비공식 접촉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위 공사는 “대부분의 견해는 북핵문제에 대한 조속한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측의 견해이기도 하다”면서 “6자회담 조기복귀에 거의 권

센서스가 있었지만 아직은 조기복귀에 대한 서로의 전제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 위 공사는 “작년 6월에도 유사한 접촉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진 적이 있어서 올해에도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임(『연합뉴스』, 3. 7).

미국여행사, 북한 관광객 많아 성황

3월 14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한 여행사가 북한관광 상품을 내놓았는데 관광 신청자들이 예상보다 많아 싱글벙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을 인용해 보도. 이 방송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여행사인 유니버설 트래블 시스템(Universal Travel System)이 내놓은 전체 250명의 단체 북한관광 상품에 현재까지 60명이 넘는 고객이 예약했으며, 문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보도. 이 여행사가 내놓은 관광상품은 북한의 집단 체조인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올 여름을 겨냥한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들어가는 코스로 짜여졌음. 이 여행사의 클라우스 빌렙(Klaus Billep)사장은 “북한 관광상품은 1인당 3,460달러로, 최고급 호텔과 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행비는 그다지 비싼 편이 아니다”면서 여행객들을 무난히 모집할 것으로 전망. 그는 “북한은 치안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행동을 하지 않고 여행 안내자의 지시에 잘 따른다면 여행 안전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밝힘. 빌렙 사장은 또 “북한 당국이 지난 2004년에 방북 비자를 내주었다가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싸고 북·미간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돌연 비자를 취소한 적이 있다”며 “이번 북한 관광상품의 성공여부는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평온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희망하고 있다고 전함(『연합뉴스』, 3. 14).

일본, 대북한 수출 규제

3월 16일 『세계일보』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압력 수단으로 신설한 ‘납치문제 전문간사회’ 첫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보도. 이 회의는 산하 조직으로 ‘법집행반’과 ‘정보수집회의’를 두고 있음. 스즈키 세이지(鈴木政二) 관방 부장관이 책임자인 이 회의는 ‘법집행반’을 가동해 북한에서 전용 가능한 중고 자동차나 타이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음. 이날 결정된 대북 수출 감시대상 품목은 중고 자동차, 중고타이어, 고무·플라스틱 제품과 화학폐기물 등임.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전기·전자·금속 제품과 중고 타이어는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며, 폐타이어는 용해 처리해 연료용으로 재활용된다고 보고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세계일보』는 덧붙임(『세계일보』, 3. 16).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북한 관련 부분

3월 17일 『연합뉴스』는 미국이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을 폭정체제로 규정하고 북핵문제를 ‘심각한 도전’으로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도. 다음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북한관련 부분임(『연합뉴스』, 3. 17).

< 북핵, 위폐, 군사적 위협 포괄적 지적 >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와 함께 폭정체제로 규정했다. 한때 ‘북한=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명명했던 미국의 부정적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거론,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면서 소형 핵무기와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내세우며 동북아지역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란과 함께 ‘심각한 핵확산 도전세력’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중적이고 협상결과를 잘 지키지 않는 고약하고 오랜 전력을 갖고 있고 과거에 미국을 동맹국들로부터 이간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북한이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성공적으로 이뤘다며 북핵공조를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 냉전시대 라이벌이었던 러시아,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낸 데 대해 “북한에게 핵프로그램을 압박하는 데 있어 역사적 라이벌과 이해적인 공조를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작년 9월 19일 북핵 6자회담 참가국간에 서명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에선 또 관계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하며 북핵 6자회담의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란의 경우처럼 북핵문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에 대해선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계속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북핵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의 달러화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는 등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군사력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굶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이런 정책을 바꾸고, 정치 시스템을 개방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이 야기하는 효과에 맞서 국가적,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대북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 당국자 개성공단 첫 방문

3월 21일 『서울신문』은 미국 하원 관계자와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등 4명이 북한

의 초청장을 받아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북한이 미 당국자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미 하원 스태프 멤버인 더글러스 앤더슨이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면서 “개성공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갔다”고 말했음. 이날 방문은 남북경협 의 상징인 개성공단 현장을 돌아보기를 희망한 미국측 의사에 따라 비공개리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음.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당국자들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번 방문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지난 16일 “한반도에 미묘한 정세변화가 있다”며 “미국이 북의 개방 의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한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묘한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고 『서울신문』은 덧붙임(『서울신문』, 3. 21).

EU 북한 인권-지원 연계

3월 23일 『조선일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 22일 EU(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한 인권대회’를 계기로 유럽 의회는 EU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하는 등 조건부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음. 또 23일 오후에는 유럽 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 청문회를 개최. 미국과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이날 ‘북한 인권대회’에서 유럽 의회 내 한반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슈트반 센트 이바니(헝가리) 의원은 “그동안 유럽 의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에 그 심각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음. 또 “한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EU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에게까지 돌아가야 하며, EU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사이카 후미코(齊賀富美) 일본 인권담당대사는 “남북자문제는 일본의 국가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라며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함(『조선일보』, 3. 23).

EU, 고려항공 등 블랙리스트 발표

3월 23일 『문화일보』는 유럽연합(EU)이 22일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사들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 항공사들의 EU 역내 취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 EU 교통위원회는 이날 북한, 태국, 아프가니스탄, 스와질란드 소속 항공사 등 국제 항공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세계 92개 항공사 명단을 발표했다고 BBC 등 유럽 언론들이 보도. 명단에는 북한의 고려항공, 태국의 푸젯항공, 아프가니스탄

의 아리아나 아프간항공 등이 포함돼 있음.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들은 오는 25일부터 EU 25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 취항이 금지될 계획임. EU는 지난해 항공기 사고로 세계 곳곳에서 500여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빈발하자 회원국 공동으로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3개월마다 한번씩 이를 업데이트할 예정. EU 교통위원장 자크 바로는 “이들 항공기의 대부분은 현재 유럽 내에 취항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위험 비행기의 역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문화일보』는 보도(『문화일보』, 3. 23).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06년 3월호

발행 / 2006년 3월 25일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발행인 / 한국개발연구원장 한정택
편집위원 / 고일동, 조동호, 김상기
김상훈, 김은영

(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205
fax: 02-967-0186
<http://www.kdi.re.kr>
e-mail: ksklyh@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2006